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

일시 2021.10.28.(목) 14:00~16:00

장소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대강당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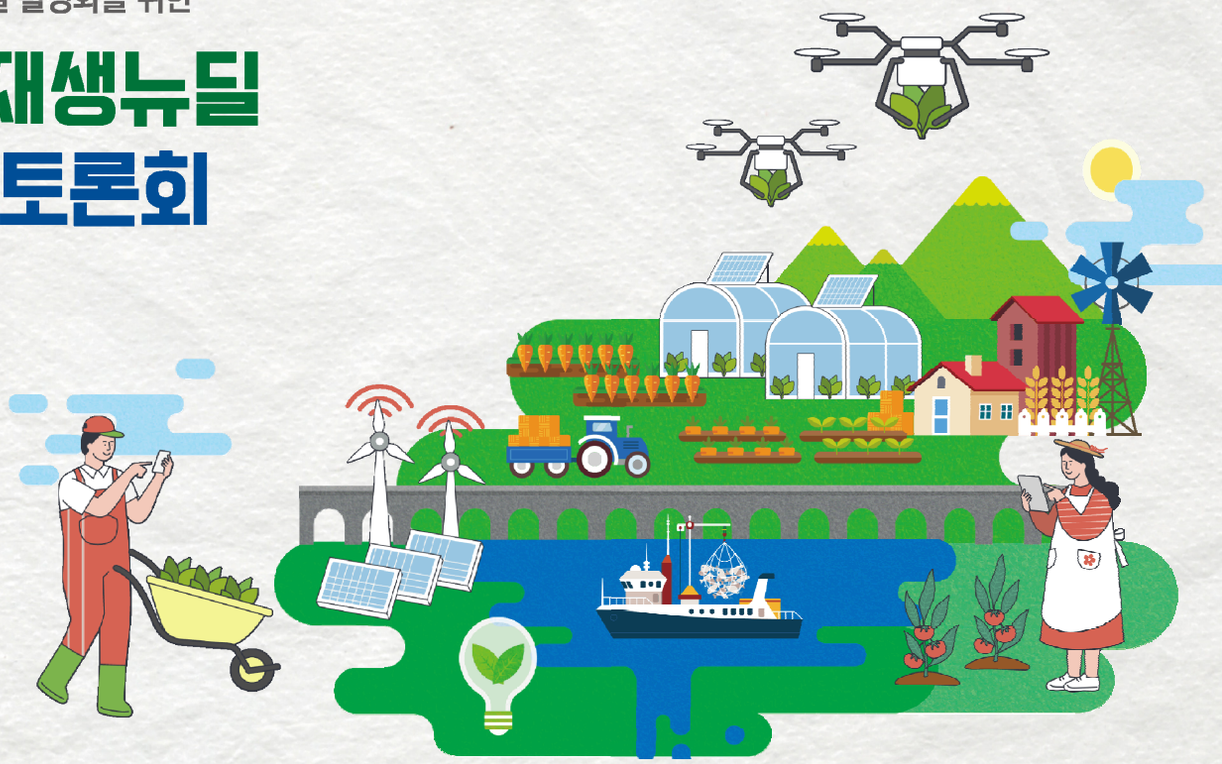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

순서

14:00~14:01	개회	
14:01~14:05	참석자 소개	
14:05~14:15	인사말씀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철수**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14:15~14:35	주제 발표	**주제 1: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기본방향**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팀장
14:35~14:55		**주제 2: 지역균형뉴딜과 지역의 과제**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
14:55~15:55	종합 토론	좌 장: **김향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 위원장 토론자: **오형식**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과장 **조성근**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정승환** 전북고창군 4-H연합회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한지훈** 전북대학교 교수(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총괄) **홍명희**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사무국장
15:55~16:00	폐회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



목차

주제 발표 1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기본방향** ····· 1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팀장

주제 발표 2 **지역균형뉴딜과 지역의 과제** ····· 17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

종합 토론 ····· 41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

주제 발표 1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기본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팀장 **정문수**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기본방향

2021. 10.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Ⅰ. 추진배경 ····· 5

Ⅱ. 농촌의 여건 및 과제 ····· 6

Ⅲ.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추진방향 ····· 8

〈참고〉 농촌재생뉴딜 분야별 추진과제 ····· 13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구조의 대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

○ **디지털 및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추진

○ 국내 및 해외(OECD)에서 뉴노멀(**비대면·온택트 사회, 저밀도·분산형 경제**)시대 농촌이 **혁신의 무대**로 주목

□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는 농촌을 대상으로 **재생뉴딜** 요구 증대

VIP말씀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할 것"('20.11.11)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공간계획 수립으로 농촌재생뉴딜 추진"('21.1.28)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의 핵심축**으로서 농촌의 잠재성을 농촌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 가능

○ 시민에게 경제 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제공하면서 활력이 증가하는 사례를 활용시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가능

□ 그러나, 농촌은 **도농간 불균형 발전**과 **무분별한 농촌공간 개발**로 인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농촌공간에 대한 개별 부처 차원의 **분산적 접근과 단편적 지원**에 치우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미흡

○ 농촌에 공장·창고·태양광시설 등 난립으로 성장 잠재력 및 **농촌다움 훼손**

□ 농촌이 인구감소, 활력 저하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상황을 딛고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정책의 대전환** 필요

○ 농촌에서 도시와 농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계획적 재구조화 전략** 필요

○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 **포용적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자리·정주·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재생전략** 필요

☞ **농촌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공간계획에 입각한 정책 추진 필요**

Ⅱ. 농촌의 여건 및 과제

□ 농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규정

○ 농촌은 **읍·면지역** 등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89%(국토 100,425㎢ 중 **91,780㎢**)를 차지하며, **9,716천명**의 주민이 거주

□ 산업 고도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도농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농촌은 도시와 **대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향

○ ′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농촌활력 저하

* 인구 수(도시/농촌, 만명) : ('80) 2,212/1,600 → ('00) 3,762/938 → ('19) 4,202/975
* 농촌의 14세 미만/65세 이상 비중(%) : ('80) /5.6 → ('00) 18.6/14.7 → ('19) 11.5/23.1

○ 도농간 주거·의료·문화·여가 등 생활 서비스와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멸 위험 농어촌 지역**도 증가

* 생활여건 만족도('18년 복지실태조사, 농진청) : 도시(61.3점) > 농촌(55.8)
* 어린이집 없는 읍면 476개('19), 시내버스 미운행 행정리 2,349개('15), 산부인과 없는 시·군 21개('18)
* 농촌생활 불만족 요소(KREI 국민의식조사 '20): 주거/생활환경 열악 38.7%, 의료환경 미흡 20.2%

□ 농촌공간 내부에서도 **토지이용 체계 부재 및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농촌다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 경제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주거시설과 축사·공장·창고** 등 각종 **산업시설이 혼재**하는 등 난개발 심화

- 농촌 마을 내 **축산 악취**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및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전국 축사 311천개소 중 253천개소(81%)가 주거지 내 또는 500m 이내에 위치

○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공장**이 농촌 마을 인근에 입지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 위해요인**으로 작용

* 전체 취락지구 20,485개 중 100m범위 내 공장 용지가 있는 경우는 2,815개

○ **빈집·폐건축물 방치**로 주민의 생활안전 위협 및 경관 훼손

* 농촌주택(392만호) 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27.4%(도시 13.6%), 빈집 6만동('19)

○ ′12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시설**은 생태계·환경과 생활안전 위협 우려

* 태양광 농지전용 : '12) 180건/34ha → '17) 6,593/1,437 → '19) 11,847/2,555

< 주택과 공장의 혼재 >

< 마을 인근에 입지한 축사 >

< 태양광 에너지시설 난립>

< 공사 중단 후 방치된 건축물 >

□ 국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가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

○ 농촌공간에서 **무질서·무계획적 개발**이 지속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농촌발전과 지속 가능성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농촌에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난개발과 발전 정체**의 **악순환**에 갇히게 될 우려

* 청년층은 열악한 **교육·보육** 여건과 **일자리** 부족을, **고령층**은 **주거·의료·교통** 여건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

** 농촌 이주의 가장 **중요한 요건** 1위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및 생활 환경(51%)'(KREI, '19)

□ 향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양적인 접근보다는 **단일의 정책추진체계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

○ 대도시 인구 집중 등에 따른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을 연계하는 공간전략** 필요

○ 농촌발전정책은 도시와의 격차 완화보다는 **지역특화**에 기초하여 농촌을 **혁신적·창의적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데 집중할 필요

☞ 농촌이 농촌과 도시, 농업인과 도시민을 위한 **포용적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간 연계** 등 **계획적 접근** 필요

Ⅲ.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뉴딜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정책목표)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재생**(회복)

○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지향

○ 농촌의 도시화를 넘어선 농업·농촌 고유의 정체성·차별성을 확립함으로써 **농촌의 자생력**을 확보

□ (정책수단) 농촌재생뉴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원

○ 농촌 재생에 필수적인 일자리, 주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

○ **농촌공간정비, 넷제로, 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

□ (정책대상) 행정구역 및 **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원

○ 단독 지역이나 개별 주민 중심의 지원이 아닌 **지역생태계 형성 차원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

○ 일자리 등 일부 사업은 개별적으로 공모하여 지원

□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사업 추진

○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자발적·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추진

○ 공간계획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나 기준이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법적 기반 구축

□ (정책기반) 농촌재생뉴딜에 맞는 **새로운 기반 구축**

○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재생에너지** 등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고,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 **주민협약, 중간지원기구** 등 농촌재생뉴딜을 위한 기반 구축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

목표

사람과 환경 중심의 포용적 성장·발전 공간 구축

재원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4대 전략

농촌공간계획 + 농촌재생뉴딜

토지이용제도	중장기계획	공간재구조화	재생지원
■ 용도지역 개편 ■ 농촌형용도지구 신설	■ 국가농촌공간계획 ■ 농촌공간기본계획 ■ 농촌공간관리계획	■ 공간정비 ■ 집적화 ■ 이전·재배치	■ 일자리,경제기반 ■ 정주·주거여건 ■ 사회서비스

추진기반

1 농촌협약, 주민협정
2 사업구조 및 지원·관리방식 개편
3 농촌공간계획지원기구(관리기구, 전문기구)

제도기반

■ 농촌공간계획법
■ 국토계획법

3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지역을 포함한 국토의 개발과 보전 등은 「**국토계획법**」에 규정

○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고, **용도지구**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계획	생산	보전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 농촌은 주로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관리

□ 현행 국토계획제도는 **도시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계획적 토지 이용에 한계**

○ **도시**는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규제도 조밀

* 주거(전용·일반·준주거), 상업(중심·일반·근린), 공업(전용·일반·준공업) 등 세부 구분

○ 농촌은 '**도시화의 잠재(유보)공간** 또는 농업 생산공간'으로 간주되어 주거·경관 등 **비농업적 토지이용 수요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 특히, 읍·면인구의 28.8%가 거주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공장, 축사,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 혼재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면적 106,210㎢ 중 11.4%인 12,080㎢(그 중 11,697㎢는 읍·면 지역에 해당)

* 개발행위 허가건수('18) : (계획관리) 48,315건, (생산) 16,761, (보전) 12,734, (농림) 13,148

□ 농촌은 국가차원의 **공간계획에서 소외**되면서 **계획적·체계적 개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농촌다움을 유지한 쾌적한 공간 조성에 한계

○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도시·군기본(관리)계획**(국토계획법)은 인구·산업이 밀집된 **도시중심**의 계획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20년 단위)의 경우 인구 10만 이하 시군(12개 시, 73개 군)에 수립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장기 발전전략 수립 기반 미흡

○ **성장관리계획 제도**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나 도시 확장에 따른 개념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는 한계

☞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재구조화하고,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달성**

4 추진방향(안)

□ 농촌공간계획(제도)은 "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

○ 농촌공간계획(제도)은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통해 농업·농촌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

□ 농촌공간계획제도는 **▲토지이용체계 개편, ▲중장기계획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이 핵심적인 요소

○ **(토지이용체계 개편) 난개발과 주거·공장·축사 등이 혼재**되어 있는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보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예시 : 농촌 특성에 맞는 용도지구 신설 또는 용도지역 개편 등

○ **(중장기계획 수립)** 국가, 시·군의 농촌지역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은 특성에 따라 주거·산업·축산·재생에너지 등 **공간구조 관리**

-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기본(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으로 농촌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기본(관리)계획**을 수립
-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의 역할과 협업 강화,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하여 **기관협약 및 주민협정** 제도 도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기본(관리)계획을 토대로 농식품부-지자체 **협약을 통해 패키지 방식으로 사업 지원**

- 농촌재생을 위해 ①공간정비와 함께 ②일자리·경제기반, ③주거·정주여건, ④사회서비스 제공을 **균형적으로 지원**
- 중앙은 **메뉴방식**으로 지원가능 사업을 제시하고 지자체(시·군)가 필요사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협약을 통해 **사업 패키지 지원**

☞ 농촌공간계획 추진 뒷받침을 위해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제도화)

≪ 기 대 효 과 ≫

□ **농촌 난개발 치유·예방**과 **농촌다움 복원**, 일터·삶터·쉼터로의 기능 재생을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및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 귀농·귀촌 활성화로 도시 과밀화 해소 및 **도-농 균형발전에 기여**

5 지원체계

정책현황

□ 농촌정책은 **중앙정부, 지방 등 거버넌스 주체가 수직적**으로 설정

○ 중앙정부에서 시·군 등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을 감독하는 구조

□ 중앙정부, 지자체와 주민은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닌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구조로 전환

추진체계

□ (통합지침) 사업구조 개편 등 새로운 공간계획정책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지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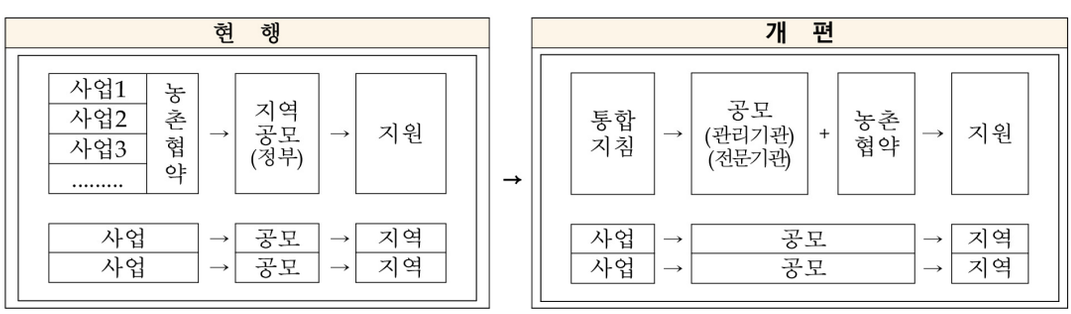
○ 농촌재생(프로그램)에 포함된 개별사업은 통합지침을 작성하여 사업간 연계하고 효율성 제고

- 농특회계, 균특회계 등 회계에 관계없이 **농촌재생**(일자리, 주거, 사회서비스 등)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 (지원기구) 사업관리 및 지자체 지원 등을 위한 **지원기구** 운영

○ 농촌공간계획 '관리기관'은 통합지침을 운영하면서 농촌공간계획에 따르는 대상자 선정, **모니터링, 환류 등 지원**

○ 농촌공간계획 '전문기관'은 지자체의 공간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계획수립 등 공간계획 추진 과정 지원



□ **(농촌협약) 농식품부와 지자체**(시·군) 간의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 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재생뉴딜을 통합 지원

○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 사업을 **종합적·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농촌협약 대상사업(안) : ('22) 농식품부+국토부 30개 사업 → ('23) 복지+문화+교육

참고 **농촌재생뉴딜 분야별 추진과제**

1 일자리 · 경제활력 제고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창업 공간, 주거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농식품 체인의 스마트화·디지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구조의 전환
◇ 넷제로 및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기회 창출

가. 청년 등 인프라 지원

□ 농업·농촌 분야의 자원을 활용하는 **청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고,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창업생태계 조성** 추진

○ **시·군 거점 지역**에 창업공간, 판매관을 갖춘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층, 귀농·귀촌인** 대상 **창업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 지역자원(특화 품목, 농촌 경관·문화, 빈집 등)과 결합하거나 ICT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창업자 우선 지원

○ **창업공간**(공유오피스), **위성사무실** 등 5G 기반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주택·보육·여가 공간과 연계하는 **스마트 업무복합공간 조성**

* 프랑스 로홈므(Lormes)에서는 도축장을 개조한 '농촌 디지털 허브(rural digital hub)'를 조성하여 주민 공동작업, 디지털 교육, 화상통신, 원격근무 장소를 제공

< 일본 가미야마 위성오피스 >	< 프랑스 로홈므마을 디지털허브 >

나. 농산업 구조의 전환

□ (스마트화) 재배시설·축사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위해 **시설농업지구·축산지구**를 지정하고, **단지 조성**을 통한 **스마트화 추진**

○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원예 및 노지작물 경영체의 집적화**를 위한 **스마트 단지 조성** 및 용수시설·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축산지구**의 **기반조성 비용**, 축산단지 내 **관제센터 건설비** 등을 지원하고 **축사 시설 건설비 지원**을 통한 스마트축산 ICT 단지 조성

□ (리모델링) 노후·미분양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혁신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

○ **지역자원 기반**의 1·2·3차 산업이 집적된 **테마단지 조성**을 위한 가공·관광 등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사례) 구례 자연드림 파크 : 농공단지에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공장과 문화체험 시설을 한 구역에 집적화

○ 기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과 산단 인프라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 등 농공단지의 **스마트·그린화 지원**

□ (산업융합) 농식품 분야와 관련된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민간과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 정부(기반)와 민간(연구+생산)의 연계협력을 통해 스마트팜, 바이오, 식품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소규모 클러스터** 및 **전원형 청년 벤처캠퍼스** 육성

○ 특화 품목, 1·2·3차 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기업체 등과 연계 및 인프라 지원

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시설을 집적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 내 주거·산업지역에 공급하는 **지역단위 탄소중립(Net Zero)** 실현

○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및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거버넌스형 발전사업 지원

*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발전계획 : ('20) 3.39 GW → ('30) 20 → ('50) 50

* 농촌 면지역 평균 전력사용량은 71GW 수준으로 70ha의 태양광 시설면적 필요

○ 주택용·농사용 전력소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농촌지역 RE100 실증마을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마련

* ① 마을 단위 마을발전소 조성, ② 공동이용시설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 ③ 농산물가공유통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 지원

□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설, 바이오가스 연계 시설·장비 등 지원

2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 주택 및 주거지 정비를 통한 대도시 인구 분산 유도
◇ 마을 정비를 통한 농촌지역의 경관 가치 극대화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

□ (**주택정비**) 면(面) 소재지 주거지역 및 농촌 중심마을(50호 이상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및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여건 개선

○ 청년층·고령자·외부유입 근로자 등을 위해 **커뮤니티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국토부·LH 협조)

- 농촌지역 **고령자**의 **공동생활주택을 조성**하여 고령·독거 주민의 **주거·돌봄 공간 마련**

○ 취약계층 주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상·하수도,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등)을 추진

○ 농촌 빈집에 대한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에 제공

□ (**마을정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마을만들기** 등을 활용하여 농촌 마을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지역으로 재정비

○ **농촌 마을지구 중심**으로 **빈집 정비**와 함께 **간판·표지판, 전신주 정리** 등 농촌 경관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 **주차장, 창고**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마을 도랑 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 등 **마을 정비 추진**

□ (계획개발) 농촌마을, 중심지, 기초거점 등이 연계된 계획적 개발 추진

○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활권 단위**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한 **종합적인 정비 지원**

○ 마을에 혼재되어 있거나, 마을 인근에 있는 **공장, 축사, 재생에너지 시설**을 관련 지구로 이전

*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마을 내 악취 축사(1,070개소, 318ha), 유해시설 공장(1,237개소, 4,221ha)의 이전·정비 우선 추진('21~'30)

3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사회적경제 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 활성화
◇ IT 기술 활용 등 농촌형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및 보급

□ 농촌지역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관련 주체의 정책적 육성을 통해 **스마트 농업·농촌 생태계 조성**

○ **농촌특화 교육·교통·복지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IT·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스마트화 추진**

* (교육) 생태·영재·아토피·보육통합학교, (교통) 100원 택시, 커뮤니티 버스, (복지) 농촌형 공공근로(마을회관 등 방문형 돌봄으로 도시지역 자녀와 영상통화 플랫폼 지원), (의료) 원격 건강상담·모니터링, (돌봄·보육) 사회적 농장, 농촌 아이공동돌봄센터 등

○ 복합거점시설 중심 **5G 통신망 우선 구축**, 도서·벽지 등 농촌마을 **초고속인터넷 보급**, 공공장소 **WiFi 설치**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기부)

□ 농촌 지역의 주민 및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에 **정착**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금 지원**

○ 사회적 농업,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지원하여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분야 **사회적 가치 확산**

* 사회적 농업 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공동체 활동공간, 사무실, 사업장, 판매장 등 기반시설 지원 병행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이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관련 **공동체 조직화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창업, 교육·실습, R&D, 판로개척 지원

□ 지역의 **기초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행정·교육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보육·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 **복합생활 SOC*** **확충 및 연계** 강화

* 다기능 복합생활 SOC : ('20) 141개소 운영 중(552개소 추진 중) → ('30) 1,400개소 운영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

주제 발표 2

지역균형뉴딜과 지역의 과제

전주대학교 교수 **정철모**

지역균형뉴딜과 지역의 과제

▶ 2021.10.28

전주대학교 정철모교수

목차

1. 지역균형뉴딜정책의 개요
2. 전북의 지역균형뉴딜정책
3. 농촌재생뉴딜에 대응한 전북의 농정
4. 농촌재생의 패러다임 전환
5. 외국의 지역재생정책 사례
6. 지역균형뉴딜과 전북지역의 과제

1. 지역균형뉴딜정책의 개요

1.1 지역균형뉴딜 정책의 개요

▶ (지역균형 뉴딜 개념)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된 개념

< 지역균형 뉴딜 구분 >

구 분	내 용	예 시
①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 (지방비 매칭사업 등)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
②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한국판 뉴딜과 연계, 지자체가 자체재원+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ZEB) 가속화 추진(서울) ▪로봇화공장 롤모델 구축(대구)
③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혁신도시)

* ❶지방비 매칭 사업 + ❷집행시 지역기업·인력이 활용되어 지역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R&D 제외), '안전망 강화사업'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므로 제외

< 지역균형 뉴딜 개념도 >

자료; 관계부처합동, 지역과 함께하는「지역균형뉴딜정책, 2021. 10

3

1.2 국토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4

2. 전북의 지역균형뉴딜정책

2.1 전북형 지역뉴딜정책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

<전북형 뉴딜 추진체계>

2.2 전북형 지역뉴딜정책 중점과제

뉴딜	분 야	핵 심 과 제
디지털	D.N.A 융합 전북경제	1. 전북형 AI·데이터 댐 2.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대표사업 1> 3. D.N.A융합 창업·기업 성장사다리
	스마트 농생명밸리 2.0	1. ICT 융합 스마트 농장 확산 2. 스마트 농생명 경쟁력 강화 3. 지능형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 4. 디지털 종자·식품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대표사업 2>
	디지털 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1. 초실감 홀로그램산업 클러스터 <대표사업 3> 2. 전북문화관광 실감콘텐츠 기반강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삶터전북	1. 전북SOC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2. 전북형 첨단 교통플랫폼 구축 3. 스마트 그린 전북터전 조성 4. 드론기반 안전망 구축 <대표사업 4>
그린	신재생에너지 1번지 ·에너지전환 확대	1. 해상풍력 발전에너지 공급확대 2. 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RE100) <대표사업 5> 3. 그린수소 산업클러스터 4.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확대
	그린모빌리티 산업경제 전환	1. 그린 모빌리티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대표사업 6> 2.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수소·전기) 3. 그린 스마트 행복 산업단지 조성
	천년산하 생태백신·그린바이오	1. 하천·산림·해양 생태백신 기반확충 <대표사업 7> 2. 탄소중립 그린인프라 전환 3. 농생명 소재 기반 그린바이오 생태계 구축
안전망	전북형 뉴딜 인재양성	1. 전북형 뉴딜 상생형 일자리 창출 2. 전북형 뉴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대표사업 8>
	디지털 돌봄·포용	1. 스마트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2. 전북형 디지털 포용사업

3. 농촌재생뉴딜에 대응한 전북의 농정

3.1 전북도 농정의 추진방안

전북도 삼락농정

전북도, 삼락농정 ; **1조 4,140**억원 투자

- 전년도 대비 1,627억 원이 증액되어 농업·농촌분야 9,939억 원, 농식품분야 1,806억 원, 축산분야에 2,395억 원을 투자

▶ 농업재해보험·최저가격보장·공익직불금 **5,705**억원 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12**월 완공, 디지털 식품가공 등 디지털 뉴딜화

▶ 축산악취 개선 패키지 지원과 거점소독시설 방역체계 확립

▶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과 축종별 스마트 축산모델 구축

▶ 생생마을, 농촌협약 등 도농융합상생 생태문명시대 선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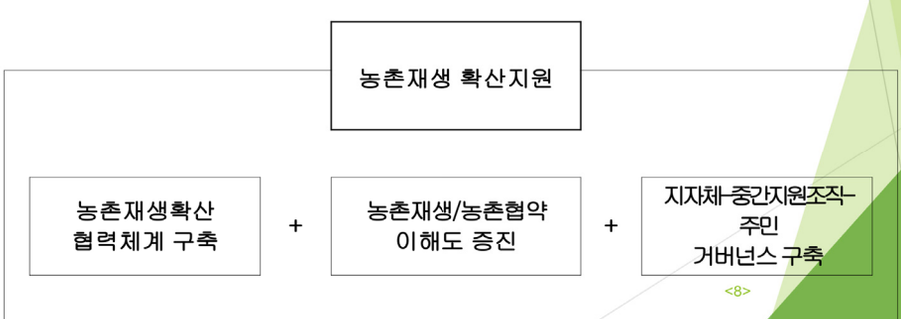
7

전북도의 농촌재생 확산지원계획

(협업)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재생확산지원사업 추진

(제도 이해) 농촌협약 및 농촌재생뉴딜사업 등과 같은 새로운 농촌정책에 맞는 통합적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의 이해도 제고 및 역량강화

(거버넌스 구축)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의 지속가능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한 자체주민 - 중간지원조직 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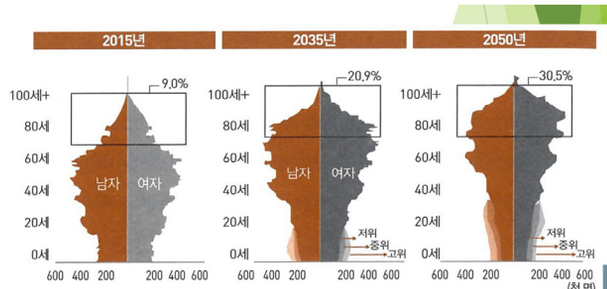
8

4. 농촌재생의 패러다임 전환

4.1 농촌의 여건변화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장래 인구추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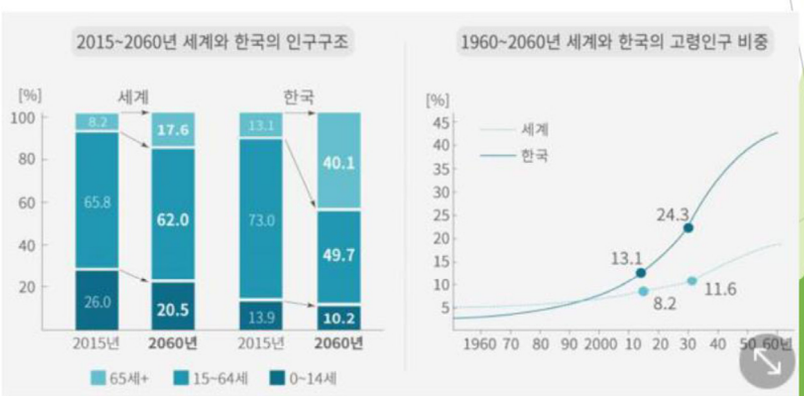
9

➢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 순위, 2060년에는 '세계 2위'**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5년 13.1%로 1960년(2.9%)에 비해 4.5배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질 전망임

➢ **노인층의 빈곤문제 심각**

- 2015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빈곤율은 48.1%로 노인 2명 중 1명은 은퇴 후에 빈곤한 상태
- 노년층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5만원 선으로 최소 노후생활비(1인 기준, 99만원)의 3분의 1수준
- 노년층 10명 중 1명은 '자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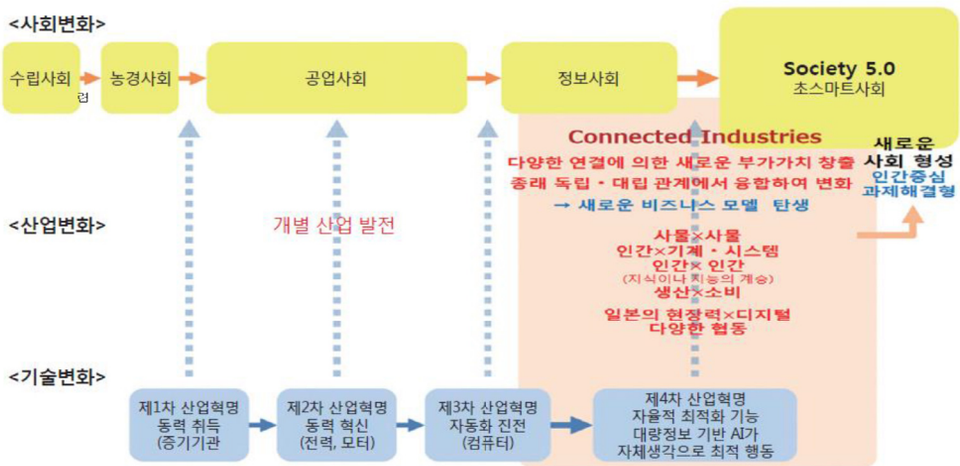


고령 인구 구성비 전망 그래프 / 출처=통계청

10

4차산업혁명과 농산업구조의 전환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폼화, 친환경화 등 주요 메가트렌드가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기술, 생산구조,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창출함으로써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 일본의 SOCIETY 5.0과 연결된 산업

11

농촌지역의 다면적인 지역가치의 재창조

- 농촌지역의 다면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시선과 방식으로 활기를 더하는 농촌 지역에서의 창조적인 지역가치창업이 급격히 증대
- 새로운 로컬크리에이터의 농촌정착지원 정책의 활성화

  (경북경제진흥원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등)

12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귀농귀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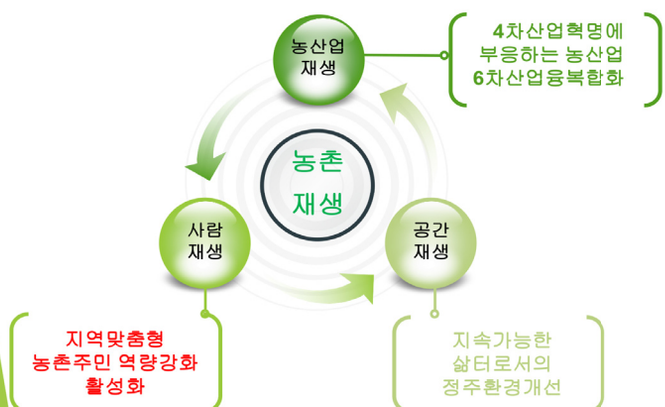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로 귀농귀촌 잠재수요층이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저밀도사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지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도시민 41.4%가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 전년보다 6.8% 증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 귀농귀촌누리집(www.returnfarm.com)의 2020년 방문자는 299만명으로 전년(208만명) 대비 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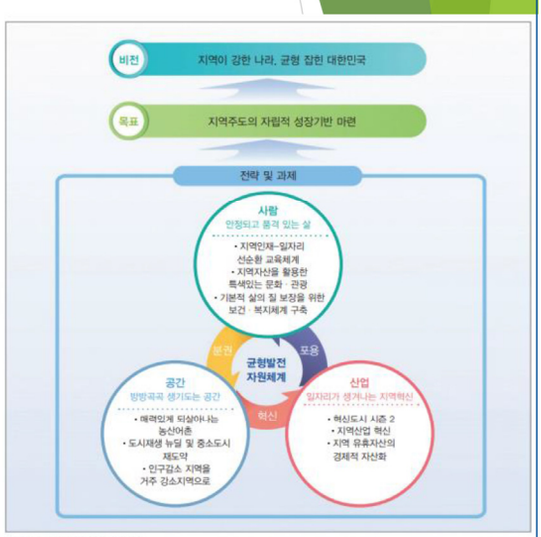
13

4.2 농촌정책의 융복합화

통합적인 농촌재생을 위한 기본틀



▶ 농촌지역의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14

5. 외국의 지역재생정책 사례

영국의 지역재생정책

■ 커뮤니티인프라세 도입

- 런던市는 독립된 기관의 타당성평가를 바탕으로 2012년 2월 '커뮤니티 인프라세'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도입을 결정함.
  - 커뮤니티 인프라세는 공익을 목적으로 런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게 됨. 이 세금은 市 자치구가 징수하며, 2008년 도시계획법(Planning Act 2008)이 명시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는 내용에 근거를 둠.
  - 커뮤니티 인프라세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존 1 지역은 평방미터당 50파운드(약 9만원), 존 2는 평방미터당 35파운드 (약 6만원), 존 3은 평방미터당 20파운드(약 3만 5000원)를 부과함

■ 도시재생펀드제도

- 런던시는 도시재생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펀드(Regeneration Fund)를 통해 7000만 파운드 (약 1240억원), 런던외곽 활성화펀드(Outer London Fund)를 통해 5000만 파운드(약 890억 원),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5700만 파운드 (약 1010억 원)를 마련함.

15

■ 영국 발리문지역의 **주거재생 거주자 세제지원**

- 보수공사에 대한 세금혜택
  - 환경자치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보수비용 전액의 10%를 10년간 소득세에서 매년 공제
- 신축공사에 대한 세금혜택
  - 신축공사에는 주택확장공사 포함
  - 세금공제는 개인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공사비용의 50%에서 5%를 10년간 소득세에서 매년 공제

미국의 낙후지역정책으로서 기회특구/펀드제도

■ 미국 양도소득세 활용 기회특구/기회펀드 제도

- 미국은 2017년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을 제정하여 기업이 저소득층 지역에 주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영
- 기존의 양도소득을 기회특구에 재투자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가 일정기간 유예되고 감면받으며 투자한 자산을 10년 동안 유지하면 이 신규 투자자산에 대한 모든 양도소득세는 면제
- 기회펀드(Opportunity Funds)는 투자자들에게 유형 혹은 무형자산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이를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유예하거나 감면을 허용
- 이런 자산의 사례로는 회사 자본금(company equity), 증권(stock), 주식(shares), 채권(bonds) 및 그림이나 예술품 같은 귀중품(valuables) 등이 해당됨
-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자들(개인과 법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적격 기회펀드 (Qualified Opportunity Fund. QOF)' 에 맡겨야 함

16

일본의 지역재생정책

일본 농촌재생정책의 주요의제로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은 관계인구(지역 응원인구, 2016년), 지역부흥협력대(도시청년 파견, 2009년), 로컬벤처(지역창업, 2009년), 고향납세(지역 기부금, 2008년), 지방창생(지역재생, 2014년), 마을/지역만들기,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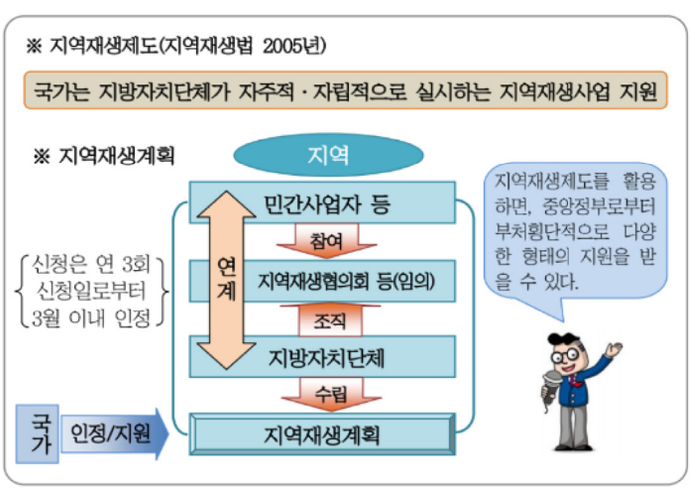
각 부처별 차별화된 추진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농림수산성은 2021년부터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농촌 프로듀서 제도'를 도입
- 총무성은 지역부흥협력대 제도는 2009년에 시작해 연간 약 1000단체, 5,300 명 이상의 대원이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편으로 로컬벤처에 연결되는 프로세스이기도 함
- 환경성은 'SDGs 로컬 투어'라는 이름으로 각지의 청년들에게 '지역환경순환권'이라는 가치를 전달하는 강연회와 SDGs를 실천하는 인재육성 추진
- 국토교통성은 공유경제, 관계인구, 커뮤니티의 근간이 되는 작은 거점을 만드는 정책을 실시

17

일본의 지역재생제도

2005년에 제정된 지역재생법은 근거하여 정부는 지역재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지역재생기본방침')을 각의결정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생본부를 내각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주요 지원 조치 메뉴

■ **지역재생법에 근거한 시책**

① 지방창생추진교부금
② 지방창생응원세제(기업판 고향납세)
③ 지역재생지원이자보급금
④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촉진에 관한 세제 특례 등
⑤ '작은 거점'(콤팩트시티) 형성에 관한 절차 특례
⑥ '생애활동의 마을' 형성에 관한 절차 특례
⑦ 농지 전용 등의 허가 특례
⑧ 보조대상시설의 전용 절차 일원화·신속화 특례
(기타: 특정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

■ **그 밖의 연동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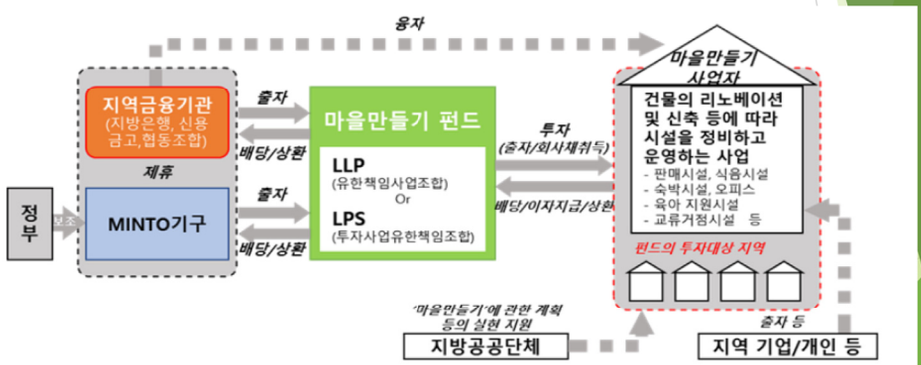
- 실천형지역고용창조사업(후생노동성)
- 농산어촌진흥교부금(농림수산업)
- 지역공공교통확보유지개선사업(국토교통성) 등

자료; 아름다운 외톨늑대, 일본의 지역재생제도, 세상편집스튜디오. https://nobopark.tistory.com/81, 2021. 6.29

18

일본의 마을만들기 펀드

일본의 지역재생지원정책의 하나인 마을만들기 펀드는 2017년부터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건물, 오래된 민가등의 재생을 통한 지역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금융기관과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기구)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펀드를 조성
- 마을만들기펀드는 지역금융기관과 MINTO기구가 같은 자금을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재생과 점포리노베이션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자에게 출자 또는 투자하는 지역관리형펀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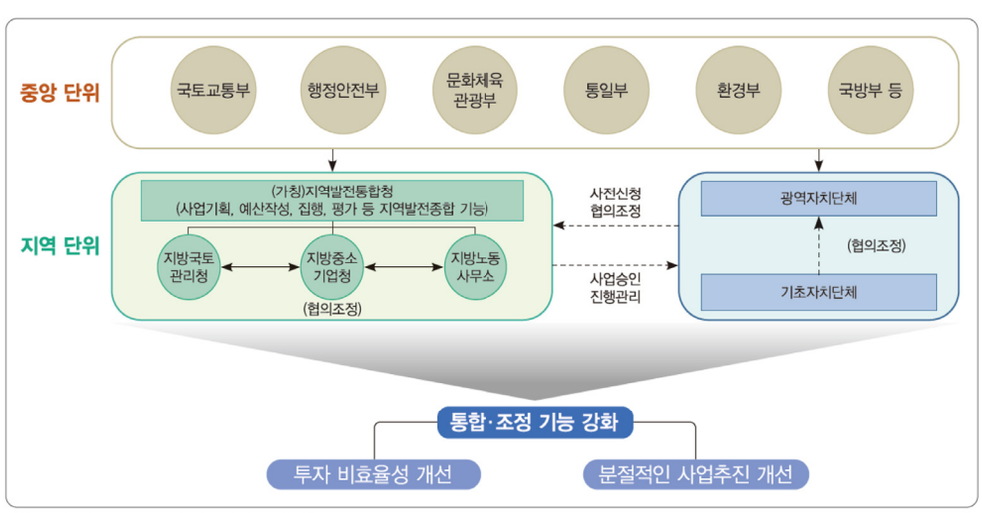
〈'MINTO기구' 홈페이지 참조〉

19

6. 지역균형뉴딜과 전북지역의 과제

부처별 지역균형정책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지역발전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출처: 차미숙 2003, 112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자료; 양진홍. 이미영.정우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국토정책 브리프 792호, 2021 11.30, p.5

20

지자체의 행정협의시스템 활성화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실과별 칸막이행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과별 예산운영의 시기와 법적인 제한등으로 장소통합적인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지자체 통합적인 행정협의회를 상시화하고 부처별 사업의 통합적 사업추진의 경우 사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담당자에 대한 승진등 고과평가시 인센티브 부여제도등 도입 필요

지자체의 감사제도의 혁신

-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중 하나로 감사제도의 기본이 법제도의 규정과 규칙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합법성이 우선되어 현실여건에 부응하는 합목적성을 우선하는 통합적인 사업 추진이 제약되고 있음
- 예산운영이나 추진에서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자율성을 설정하여 사후감사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도입 필요

지자체의 부처별 예산 통합관리 운영 권한 확대

- 부처별 정책사업의 경우 중앙부서의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융통성있는 예산의 집행과 운영관리가 어려움
- 지자체의 책임하에 중앙부처예산의 통합적인 운영관리권한을 확대하고 정책사업간 예산 운영의 통합조정과 예산집행시기 등의 조정도 가능토록 제도개선 필요

부처별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통폐합 운영시스템 구축

- 부처별 정책사업의 경우 상향적인 정책집행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중간관리조직을 지자체별로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유사연계사업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조직간의 통합운영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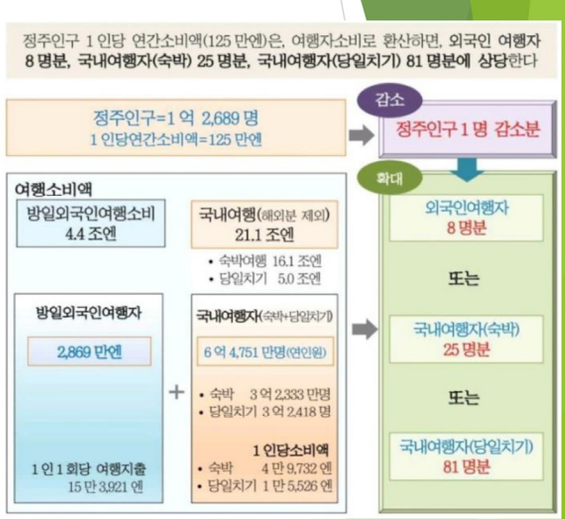
21

통합적인 인구감소대책의 추진

- 일본의 경우 정주인구, 관계인구, 교류인구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인구정책 통합적 추진

일본의 통합적인 인구정책체계

- 정주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인구
- 관계인구 — 지역과 관련있는 일자리창출과 소비를 통하여 연계되는 인구
- 교류인구 — 지역을 탐방하거나 관광하러 오는 인구



자료; 아름다운 외톨늑대, 인구감소시대 1/8:25:81법칙, 정주인구가 아니라 관계인구, 교류인구를 잡아라, 세상편집스튜디오, https://nobopark.tistory.com/81, 2021. 5.28

22

지역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재정의

지역주민 개념의 확대

<23>

23

주민참여 연계 주민자원활용방안

◆ 미국 시애틀시의 근린매칭펀드 주민자원 유형과 환산기준

구분	현금 환산 기준	세부내용
자원활동	시간당 20달러	-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의 봉사 시간 - 예: 기획회의 참석, 행사 자원봉사 등
전문서비스	시간당 최대 100달러	- 사업에 필요한 전문서비스의 가치 - 컨설팅, 예술활동, 디자인, 행사 사회 등
현물	시세기준	- 사업진행에 쓰인 모든 종류의 기부물품 - 행사용 테이블, 의자, 모임공간 등
현금	-	- 개인, 기업, 조직의 기부금

◆ 서울시 주민자원 활용을 위한 보상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 유형과 가치 환산 기준금액 설정	-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 유형 확대 - 주민자원 유형별 가치 환산 기준금액 설정
객관적이되 간소화된 주민자원 인정 절차 마련	- 주민자원 활용계획 수립 절차 도입 - 주민자원 확인을 위한 간소화된 사업절차 마련
주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적 정책지원 방안 도입	- 도입단계: 공론장을 통한 사업절차 개선 및 시범사업 실시 - 정착단계: 주민자원 인정제도 적용사업 확대 및 자부담 인정 실시 - 발전단계: 서울시 실국사업 적용 및 지역화폐 환급방안 실시

24

◆ 서울시 주민자원 세분류 사례

대분류	세분류	측정 단위	내용	동의율 (%)
자원 활동	의무활동	시간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의무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석한 활동	70.1
	회의		기획회의, 워크숍, 실무회의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한 활동	82.5
	홍보		SNS, 전화, 포스터, 현수막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작업에 참여한 활동	79.4
	실무		축제 준비, 벽화 그리기, 장보기, 차량 운전, 유아 돌봄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업무	88.7
	행정업무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사업절차상 수행한 업무	72.2
	공간운영		공동체공간 운영관리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시간(유급운영자 제외, 단 유급시간 외 추가로 참여한 시간은 포함)	87.6
재능	강의	시간	교육, 사례발표, 실무강습 등의 활동	98.2
	컨설팅		법률자문, 갈등조정, 회계 컨설팅, 디자인 자문 등	94.7
	기술	건	퍼실리테이팅, 촬영, 디자인, 연주, 수리, 제작 등	93.0
현물	공간	시간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무료로 이용한 실내외 공간	80.4
	차량		물품구입, 물품운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	77.3
	물품(대여)	건	주방도구, 공구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무료로 대여한 물품	77.3
	물품(기부)		식재료, 옷, 책, 전자제품 등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	70.1
	식음료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제공된 식음료	69.1
현금		원	자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출된 현금	-

자료; 안현찬.조윤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정책리포트 291, 2020.1, 서울연구원

25

◆ 서울시 주민자원 인정기준안

종류			측정 단위	인정금액 (원)	시중가 대비[1] (%)	시중가 근거
대분류	세분류					
자원 활동	마을강좌		시간	6,470	100	2017년 최저임금
	회의					
	홍보					
	실무					
	행정업무					
	공간운영					
재능[2]	강의		시간	96,000	80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컨설팅(자문)			75,000	110	
	기술	퍼실리테이팅		165,000	55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기준
		제작	건	247,500	55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공연		240,000	60	
		기타		실제 가격	-	인테리어설계, 집수리 등
현물[3]	공간	회의실	시간	8,000	80	스페이스클라우드 공유공간 평균 대여가(종류별)
		행사장		19,000		
		특별실		20,000		
	차량	승용차		6,000	80	쏘카 비할인 대여료(차종별)
		승합차		20,000		
		트럭		20,000		
	대여 물품	전자제품류	건	1~10만	65	온라인 렌털업체 대여가 (저가/중가/고가에 따라 차이)
		소품류		3천~1.3만		
	기부 물품	전자제품류		2만~18만	45	온라인 재활용센터 구매가 (저가/중가/고가에 따라 차이)
		소품류		3만~3.5만		
	식음료		원	실제 가격	-	행사(축제)에 기부된 음식

주: 1) 연구결과의 시중가 대비율(%) 끝자리가 5 또는 0이 되도록 절삭(시중가 근거 연동 가능)하여 인정금액(안) 제시
2) 재능은 세분류별로 전문가/비전문가로 분류(표는 전문가 기준금액만 표기)
3) 현물의 대여/기부물품은 저가/중가/고가로 분류(표는 저가~고가금액으로 표기)

26

지역맞춤형 공동체 경제활동 추진주체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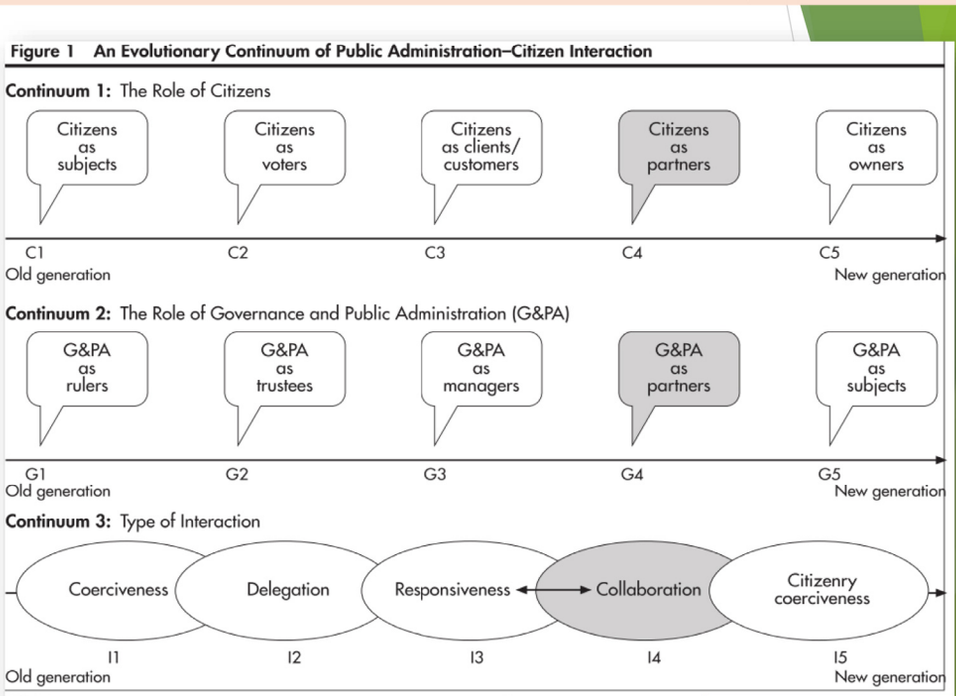
- **각 중앙부처별로 지원하는 공동체기반 사회적경제활동을 추진하는 주민주도조직의 지원육성이 필요함**

구분	내용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의 새로운 접근방식의 하나로 추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추진주체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협동조합	지역자원과 산업유휴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창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마을공동체기업	기존의 농촌개발사업의 성과와 연계하여 농촌형 공동체사업의 지원
국토해양부 마을협동조합/사회적기업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커뮤니티재생 추진주체로서 마을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추진

- **주민주도 추진조직을 위한 챌린지프로젝트 지원, 세제 및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27

- 행정과 주민간의 상호작용관계의 진화에 부응하는 지역맞춤형 주민주도 추진주체 육성 필요
-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증대에 따른 권한 확대 추진; 자율성 확충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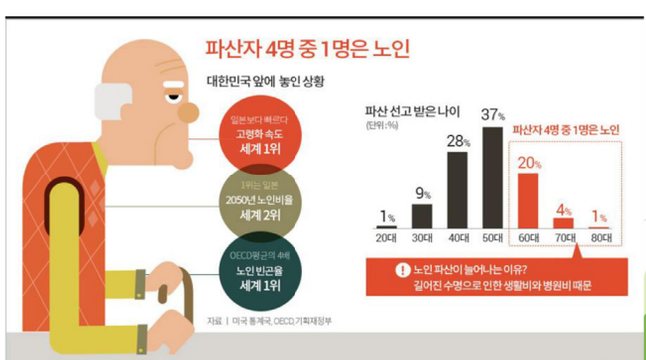
지역맞춤형 고령자 주거복지기반 확충

- 노인복지정책중 선진국의 노인 주거복지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존의 시설 중심 노인돌봄 시스템의 문제' 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주거 형태(Aging in Place)'로 그 관심이 전환되어옴
- CCRC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를 뜻하는 말로, 간병 등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고령자주택, 즉 「고령자서비스주택」의 필요성 증대
-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건강할 때부터 간병이나 의료가 필요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케어나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평생학습과 사회활동 등에 참가하는 생활시설(공동체)을 의미

1.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생존율이 높다 (59%)
2. 인생의 목적을 가진 고령자가 간병이 덜 (약 40%) 필요하다
3. 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다
4. 봉사활동이나 취미 등 활동에 참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간병 대상 인정률이 낮다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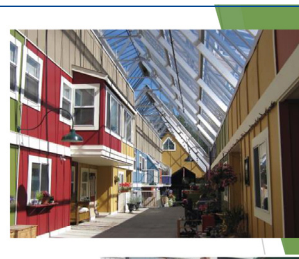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가 2014년 전국 65세 이상 1만451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실태조사'에선 "주거 구조가 고령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5.4%
- 우리나라도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지만, 고령자를 위한 주거 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노인들은 '질병, 빈곤, 고독, 무위'의 4대 고통을 겪고 있음
- 일본은 2011년 이른바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이 집에서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특히 우리나라처럼 빈곤 노인이 많고, 주택 비용이 비싼 구조에선 주거복지차원에서 획기적인 고령자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



30

유럽의 코하우징사례

- 공동주택은 공유 공간을 중심으로 개인 주택들이 모여 있는 의도적 세대통합적인 커뮤니티임
- 공유공간으로 큰 부엌, 식탁 공간, 세탁, 레크리에이션 공간, 야외 공유 공간으로는 주차, 통로, 공동 공간, 정원이 있음
- 공동주택들의 규모는 7~50세대까지 다양하며 공통적으로 개인 소유권과 공동 소유권을 결합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입주민은 자신의 집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나 콘도미니엄 형태의 임차형식으로 거주
- 공동주택 거주자는 주로 중산층이며, 가구주는 55세 이상이고 적어도 1명의 가구 구성원이 독립적인 주거 요건을 준수함
- 공동주택에서는 커뮤니티 설계과정에서부터 재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과 관리가 핵심
- 일반적으로 설계 과정에 공동주택 그룹의 설립멤버가 참여하며 공동 및 주거공간 설계 및 공간관리에 관한 규칙까지도 건축가를 포함해서 협업함



지난달 11일 오후 소피룬드 코하우징 별채 옥상 테라스에서 30대부터 70대 노인까지 연령을 초월한 5명의 이웃이 샐러드와 빵을 나누어 먹고 있다. 소피룬드 코하우징에서는 즉흥적인 피카(Fika - 스웨덴의 티타임)와 아파트 앞 정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세대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공동식당(좌)과 집회실(우)

출처 : 전국귀농운동본부, 네바다시티 코하우징 www.nccoho.org

31

핀란드의 주민주도 노인주택 조성사업 추진사례

- 노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The Active Seniors Association'를 발족
- 노인들이 시설주택조합 "ASUNTO Oy HELSINKI LOPPUKIRI"를 만들어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을 챙기며 공동체를 이루는 '노노케어'(老老 -care) 시스템 도입
- LOPPUKIRI 실버하우스는 총 7층으로 58세의 독립 아파트와 공동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중장년층 공동체 마을
- LOPPUKIRI의 재산은 사설 주택조합인 "ASUNTO Oy HELSINKI LOPPUKIRI"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대부분이 공동체의 구성원
- 가구당 면적은 36~80㎡로 다양하며 모든 독립 가구에 주방시설과 샤워시설, 발코니가 구비
  - 호텔처럼 1층과 꼭대기층에 공용공간을 넣고 2~6층에 살림집 58세를 배치
  - 입주금(56㎡·17평형 2억5500만원)도 시가보다 저렴
  - 공동공간은 1층에 공동부엌과 식당, 서재, 거실, 세탁실, 관리실 그리고 지하의 창고공간, 7층에 2개의 사우나, 체조실, 거실로 구성
-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관리를 제외한 모든 공동시설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함께 교대 조를 정해 관리

로푸키리 설립 과정

2000년 8월	은퇴한 할머니 4명 모여 협동조합 '활동적인 노인협회' 설립 노인 위한 집 짓기로 결정. 이후 은퇴 건축가 엔지니어 등 모집. 조합원 80여 명으로 급증
2001년 1월	헬싱키시. 저렴한 가격에 시유지 제공
2004년	로푸키리 건립 공사 시작
2006년 4월	로푸키리 공사 완료
2015년 9월	제2의 로푸키리 코티사타마 건립. 현재 3번째 로푸키리 건립 준비 중

로푸키리 거주민

총 68명. 최저 49세. 최고 97세. 평균연령 70세. 부부 10쌍. 홀몸 남성 4명. 홀몸 여성 44명.

로푸키리 시설

개인 거주공간 58곳. 식당. 도서관. 사우나. 창고. 세탁실 등 공동공간 450㎡

노인공동체 로푸키리 실버하우스

32

지역재생뉴딩 지원재원의 다양화

고향세 제도 도입
농촌재생을 위한 정부차원의 모태펀드재원 확보

크라우드펀드 육성
다양한 소규모 커뮤니티 마을기업의 자금 지원방식 활성화

농촌재생 지원재원 다양화

매칭펀드 제도 활용
정부재정지원에 대응한 지역주민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마을기금 운영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기금 조성

⇨ Crowd funding (Crowd financing, Crowd-sourced Fundraising)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금액과 모금기간을 정하여 **익명의 다수**(crowd)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
- 벤처기업의 또 다른 자본조달 방법임
-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2008년 1월 시작한 인디고고이며,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드는 2009년 4월 출범한 미국의 킥스타터임
-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각종 스타트업들의 주요한 자금확보방식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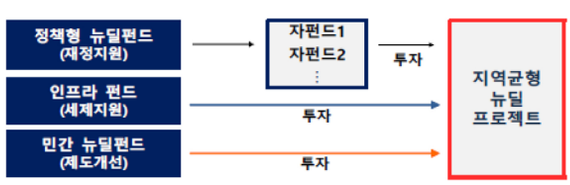
33

지역균형발전 펀드

□ **[한국판 뉴딜펀드]** 지역 민간 뉴딜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지역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 활용

○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시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 지원 추진

< 한국판 뉴딜펀드의 지역균형 뉴딜 투자 개념도 >



□ **[지방기업펀드]** 한국판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중기부) 활용('21~'22년, 2,000억원)

* (펀드조성) 38개 펀드에 대해 5,077억원 규모(모태 2,365억원 출자) 既조성('05~'19년) + '20년 모태펀드에서 460억원 출자, 약 800억원 펀드 조성 목표
(투자대상) 지방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결성액의 60%이상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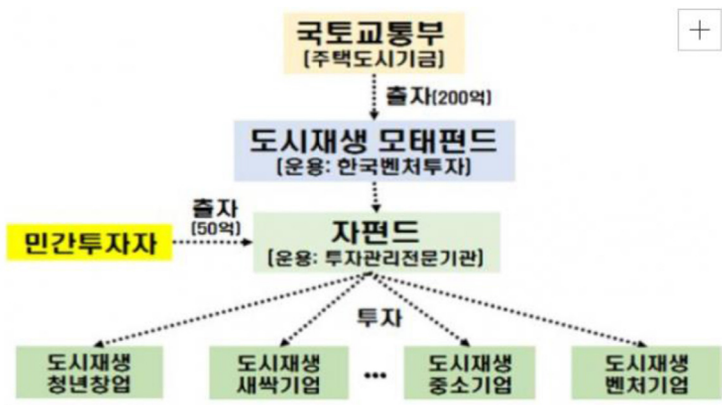
□ **[지역산업활력펀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그린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활용(산업부)

* (펀드조성) 산업부·산업은행·성장금융 공동출자 + 민간재원 추가 확보 → 총 260억원 이상 규모 조성 예정('20.4분기, 산업부)
(투자대상)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非수도권 內 디지털·그린 분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벤처기업

34

국토부 도시재생펀드 운영사례

-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정책펀드임
  - 그간 단위사업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 재생지역 내 경제주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도입
- 제1호 펀드는 더웰스인베스먼트가 25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5개 유망기업에 45억원 투자 중이며, 제2호 펀드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250억원 규모로 운영
-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125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에서 100억원과 민간 출자금 25억원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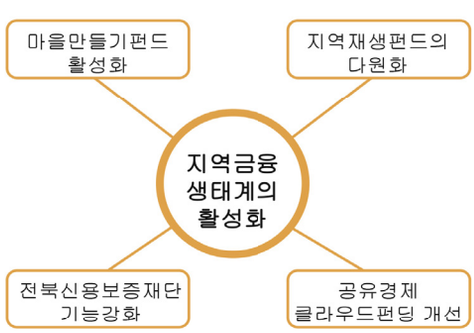


▲도시재생 모태펀드 구조도 (국토교통부)

35

지역재생을 위한 다면적인 지역금융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재생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시스템의 구조개편 필요
- 주민공동체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 비즈니스와 로컬벤처등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금융지원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천펀드, 지역내 새마을금고와
은행등의 출자와 전북신용보증재단등을
연계한 지역재생 금융지원 생태계 구축

36

지역기업 연계 시스템 강화

- 지역6차산업 특성화와 혁신을 통한 창업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의 중간지원조직과 지역기업간 네트워크 체계화
- 지역기업의 인력, 자본, 시설 및 연구기능등을 네트워크화하여 연계 활성화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연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끌겠습니다!"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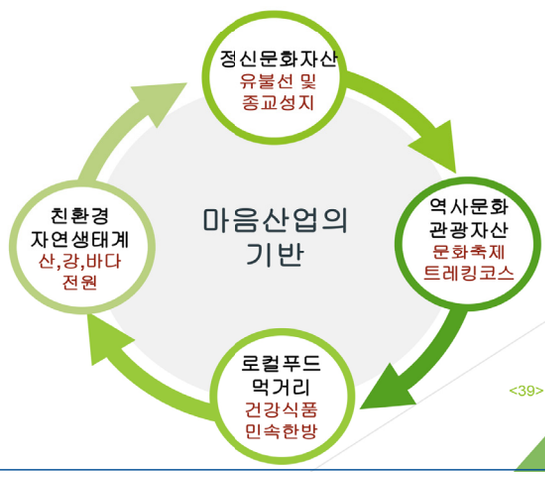
지역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계 기업참여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企業- 社會的責任, 영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 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것

38

지역자산을 활용한 마음산업의 육성

- 위드 코로나시대의 인간관계의 재조명을 기반으로 한 힐링산업으로서 농생명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생명치유산업의 발굴 육성
- 지역내 다양한 자연생태자원과 친환경 로컬푸드 먹거리 그리고 유불선의 역사문화자산과 민족종교 정신자산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여 마음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농촌재생을 위한 신활력사업으로 지역가치에 기반한 마음산업의 VALUE CHAIN 구축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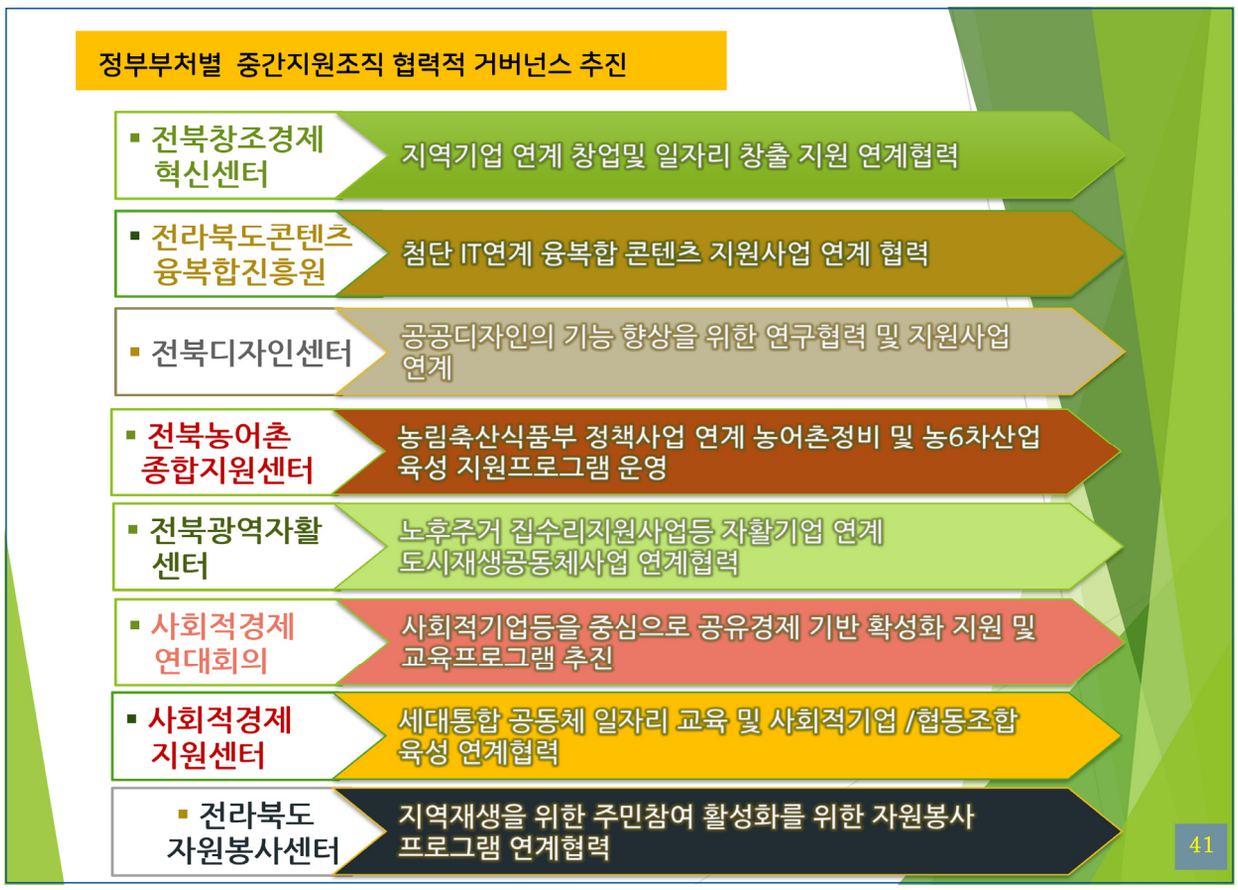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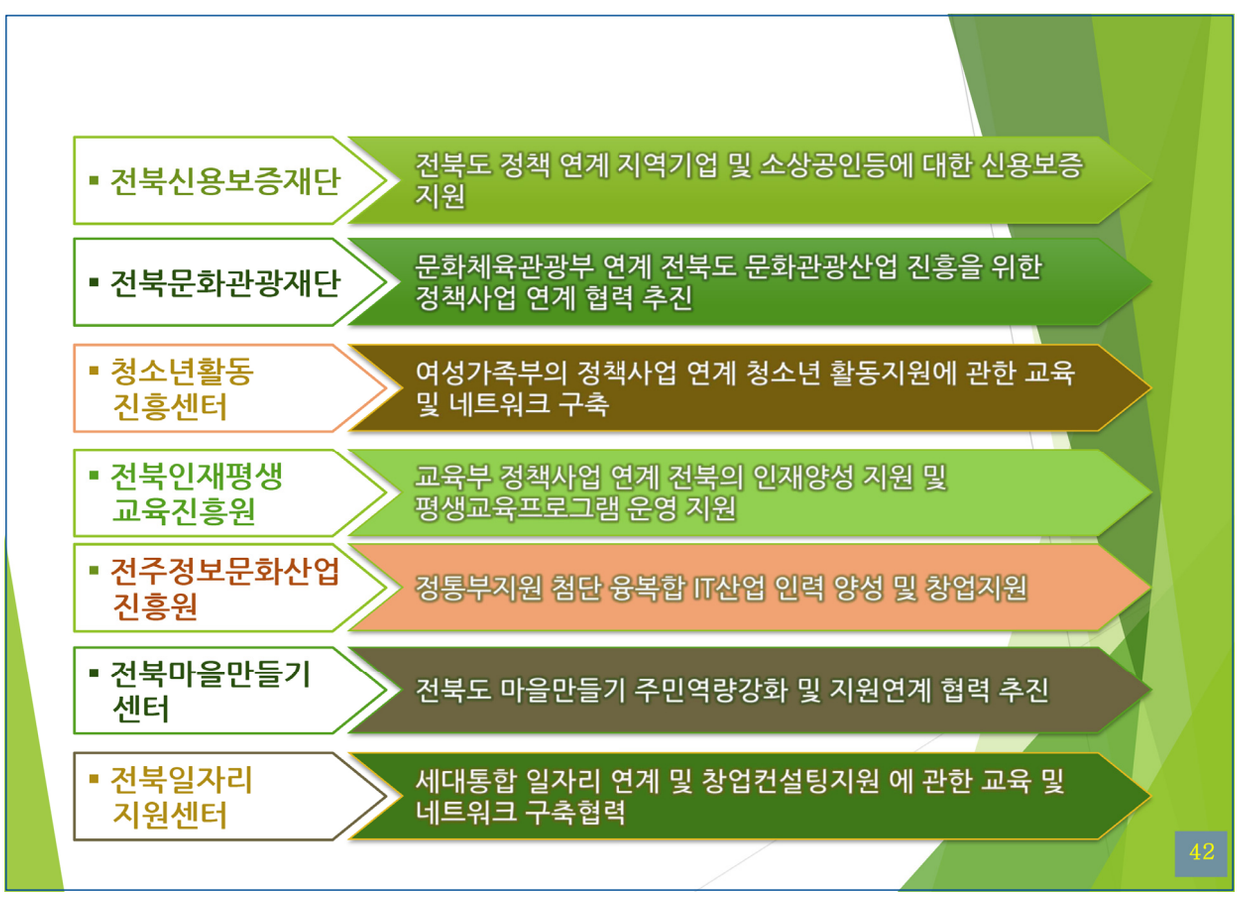
지역내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지역대학 연계협력 네트워크 추진

<40>

40


정부부처별 중간지원조직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역기업 연계 창업및 일자리 창출 지원 연계협력
▪ 전라북도콘텐츠 융복합진흥원
첨단 IT연계 융복합 콘텐츠 지원사업 연계 협력
▪ 전북디자인센터
공공디자인의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협력 및 지원사업 연계
▪ 전북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연계 농어촌정비 및 농6차산업 육성 지원프로그램 운영
▪ 전북광역자활 센터
노후주거 집수리지원사업등 자활기업 연계 도시재생공동체사업 연계협력
▪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사회적기업등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기반 확성화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세대통합 공동체 일자리 교육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연계협력
▪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지역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계협력
41


▪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도 정책 연계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전북도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 연계 협력 추진
▪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여성가족부의 정책사업 연계 청소년 활동지원에 관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 전북인재평생 교육진흥원
교육부 정책사업 연계 전북의 인재양성 지원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정통부지원 첨단 융복합 IT산업 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 전북마을만들기 센터
전북도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및 지원연계 협력 추진
▪ 전북일자리 지원센터
세대통합 일자리 연계 및 창업컨설팅지원 에 관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협력
42

감사합니다
<43>
43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뉴딜 현장 토론회

종합 토론

▮ 좌 장 **김향자**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 위원장

▮ 토론자 **오형식** |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과장

조성근 |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정승환 | 전북고창군 4-H연합회

손재권 | 전북대학교 교수

송태복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한지훈 | 전북대학교 교수(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총괄)

홍명희 |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사무국장

토론 1 농촌재생뉴딜사업 토론 발표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과장 **오형식**

농촌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경관, 생태계, 환경 등 국민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는 국가 발전의 토대이자 절대적으로 필요 존재입니다.

최근 산업화 시기가 도래하며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일부 농촌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 고령화 및 과소화에 따라 농촌의 가치와 역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터이자 쉼터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촌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질서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농촌재생뉴딜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농촌의 자원과 환경을 보고하고 농촌의 미래 가치를 증진시켜 주민들의 삶이 증진되고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유지시키는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농촌의 미래상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미래상과 비전 아래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의 가치를 재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농촌공간의 새로운 가치발굴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을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 전환하여 지역별 정책 목표에 맞게 중장기 비전과 합치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축사, 공장 등 유해요소들을 정비하고 농촌다움을 회복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내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와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이나 축사 밀집지역 오염원으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김제 용지 축산단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거지 근거리에 위치하고 환경 위해 정도가 큰 시설들을 정비지구로 선정하여 농촌공간에 대한 재정비 방안 마련이 요구되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추진근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위 공간계획, 관련제도 검토, 수요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농촌공간 정비에 대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생태복원으로 영구적 오염원을 제거하고 농촌다움을 복원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고자 삼락농정을 도정의 주요 슬로건으로 현장의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농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계획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살기좋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농촌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쇠락한 인프라와 경제기능의 악화에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농촌의 가치를 인정받고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가 농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농촌재생뉴딜 추진계획

□ 추진배경

○ 도시와 농촌, 농촌 지역 간 **정주여건 및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기반 격차**는 농촌의 삶의 질 저하와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

○ **마을 내 방치된 빈집**과 **축산 악취, 공장 유해물질**, 재생에너지시설 난립은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인구 유출 촉발, 도시로부터 유입 저해**

○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농촌지역 재생, 도시민 수용력 제고**를 위해 **농촌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정비계획** 및 투자 전략 마련 필요

☞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여 생활 여건 개선과 난개발 요소 정비, 농촌다움 회복을 종합 지원하는 농촌재생뉴딜 추진

□ 사업 내용

○ 난개발, 축산악취 등이 심각한 1~2개 면(面)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축사·공장 등 **난개발 요소의 정비, 공간조성 지원**

○ 선정된 지역의 **생활권 분석, 유해시설·주거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 주거중심지역에 **생활SOC를 집중 배치**하고 디지털 기반 확충, 공공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내 대응 상황

《농촌협약 대응 지원단 구성》

○ 2021년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이 개별 공모방식에서 농촌협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 차원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유관기관들의 협업체계 구성('20. 10.)

*****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역량강화 등

○ **기관별 주요역할**

- **(전라북도)** 도내 농촌공간계획 조정, 광역계획지원단 운영, 예산지원, 신규 사업 발굴 및 연계 등
-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연구 및 자문, 생활권 분석 등
- **(한국농어촌공사)** 포럼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참여,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위·수탁 추진
- **(전북연구원)** 농식품부에 의견 제시, 타 부처 사업과 연계방안 제안
-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시·군 중간지원조직 활용 및 연계 방안 마련
- **(한국농촌건축학회)**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 연구 등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시군에서 준비 중인 농촌협약의 이해를 돕고 계획수립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 ’21년 3월 ~ 11월

○ 대상 시·군 : 도내 13개 시·군 공무원 및 중간지원조직 등

○ 사업비 : 60백만 원(국비 30백만 원, 도비 30백만 원)

○ 교육내용 : 농촌협약 및 농촌재생뉴딜사업 등과 같은 새로운 농촌정책에 맞는 통합적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의 이해도 제고 및 역량강화

참고 1. 중앙-지방-민간 농촌협약 추진체계(안)

	중앙	광역	기초
전담	〈농촌협약 추진단〉 • (구성) 지역개발과(농촌정책국) 및 연계사업 담당부서로 구성 • (역할)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검토, 사업부서 간 의견 조정	〈전담조직(필요시)〉 • (구성) 농촌지역개발, 도시 계획, 건축 등 담당자로 구성 • (역할) 협약 평가, 협약 주체로 참여해 예산 투입, 협약 이행 등	〈전담조직〉 • (구성) 농촌지역개발, 도시 계획, 건축 등 담당자로 구성 • (역할)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협약 기획·이행 등 전담
지원	〈농촌협약 지원단〉 • (구성)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 농진청(협조) • (역할) 365 생활권 분석, 성과평가 등 관련 기준 개발, 이행 지원	〈광역 농촌협약 지원센터〉 • (구성) 광역단위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활용하여 운영 • (역할)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검토·자문, 시·군 간 조정 등 지원	〈기초 농촌협약 지원센터〉 • (구성) 기초단위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활용하여 운영 • (역할)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이행, 지역 역량 강화 등 지원

※ 농촌공간 전략계획 vs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시간적 범위	20년	5년
공간적 범위	시·군	시·군 내 생활권
기본개념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의 사업들의 통합계획
주요내용	• 시·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현황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접근성 현황 • 시·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 각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 해당 생활권의 개선·활성화를 위한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 협약 당사자 구성 및 추진체계 •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예정 사업목록, 예산·재원, 일정 등 •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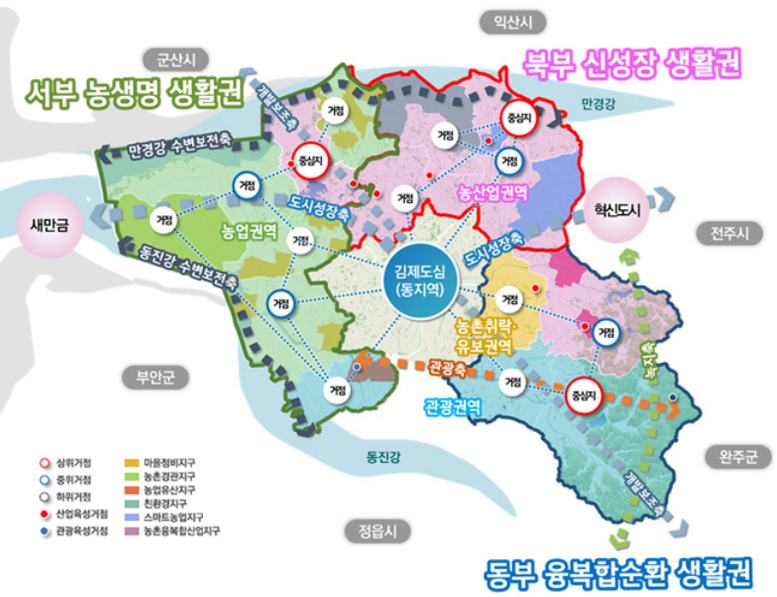
참고 2. 농촌협약 선정 현황

시도	22년 공모		시범도입 ('21. 7. 7)	일반농산어촌지역
	선정	예비		
계	17	3	12	123
전북(5)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13
경기(2)	안성시		이천시	10
강원(3)	평창군		영월군, 원주시	9
충북(4)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괴산군	11
충남(3)	청양군, 금산군		홍성군	15
전남(5)	나주시,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21
경북(5)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상주시	23
경남(5)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		밀양시, 김해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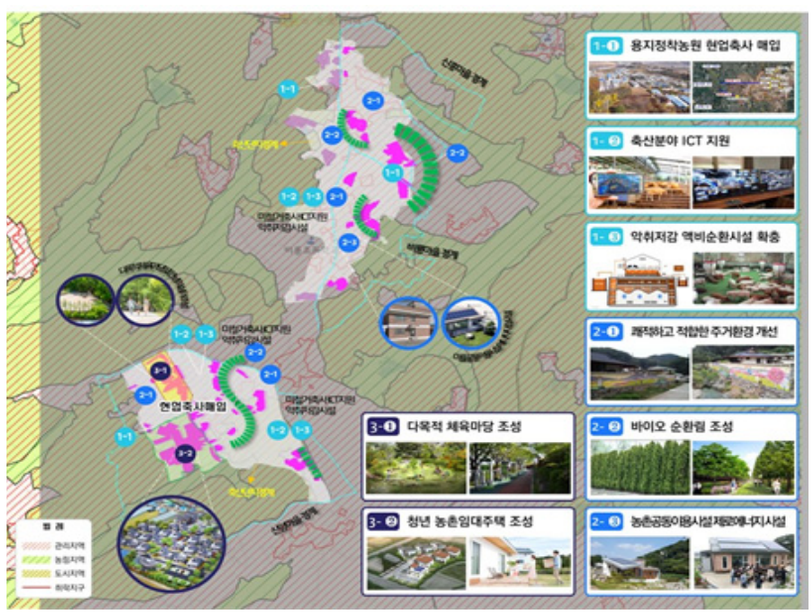
참고 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및 공간계획(안)

❍ 김제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안)

동부 융복합 순환 생활권	
생활권	• 동부권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6차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순환 생활권으로 설정
기능별 축·권역	•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연결한 관광축 설정 • 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관광권역 설정
농촌형 지구	• 농업자원과 문화자원을 결합하여 가공, 체험까지 연계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설정
서부 농생명 생활권	
생활권	• 서부권은 평야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새만금 농생명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농생명 권역 설정
기능별 축·권역	• 김제시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시성장축과 만경읍을 연결하는 개발보조축 설정 • 서부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농업권역 설정
농촌형 지구	• 지평선 경관을 중심으로 농촌경관 지구 설정 • 과소화 및 공동화 심각지역 마을정비지구 설정
북부 신성장 생활권	
생활권	• 민간육종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이 위치한 북부권은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신성장 권역으로 설정
기능별 축·권역	• 김제시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성장축 설정 • 농산업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권을 농산업권역으로 설정
농촌형 지구	• 친환경면적이 높은 지역중심 친환경지구 설정 • 스마트팜 및 축산 등 스마트농업지구 설정



❍ 김제시 농촌공간정비계획(안)



참고 4. 삼락농정 현황

❑ 삼락농정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추진전략

농민 (3대 전략)	농업 (5대 전략)	농촌 (4대 전략)
농가경영 안정	제값받는 유통체계 구축	농촌관광 활성화
농민복지 향상	지속가능한농업기반 확충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농민역량 강화	안전안심 친환경농업확대	향토자원 복합 산업화
	농·생명 R&D 및 국제교류	귀농·귀촌 여건 개선
	농생명 신 산업 육성	

세부과제

보람찾는 농민

3대전략, 7대 세부과제

1. 농가경영 안정
   (1)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2) 농어가 경영안정 확대
2. 농민복지 향상
   (1) 지역사회종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2) 농어민 안전안심 생활환경 확충
   (3) 농어촌 문화 예술 향유기반 확대
3. 농민역량 강화
   (1) 후계인력 육성
   (2)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체계

(1) 삼락농정 위원회/포럼 운영

제값받는 농업

5대 전략, 12대 세부과제

1. 제값받는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
   (1) 지역 농·식품 소비 시스템 구축
   (2) 시장에 강한 유통체계 구축
   (3) 글로벌 농·식품 유통망 확대
2.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확충
   (1) 전북 쌀산업 안정대책 추진
   (2) 안정적 원예 생산기반 마련
   (3)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4) 고부가 수산·산림자원 조성
3. 안전·안심 친환경 농업 확대
   (1) 저비용 친환경 농업 생산 정착
   (2) 친환경 농산물 안정 소비처 확보
4. 농·생명 R&D 및 국제교류
   (1)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
   (2) 지역별 신 소득작목 개발
   (3) 농업분야 국제협력 추진
5. 농생명 신 산업 육성
   (1) 미래 농생명 선도사업

사람찾는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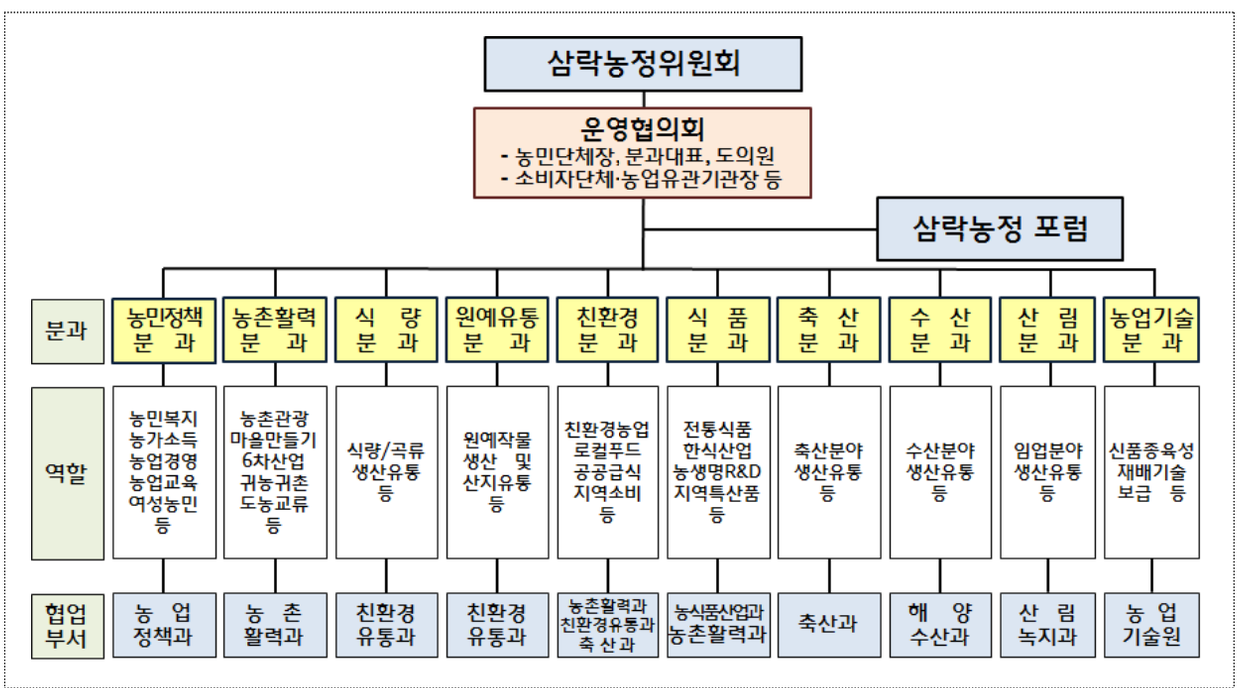
4대전략, 10대 세부과제

1. 농촌관광 활성화
   (1) 혁신적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2)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3) 축산기반 농촌관광 컨텐츠 개발
2.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1) 마을만들기 통합 추진체계 구축
   (2) 전북형 마을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3) 마을 네트워크 기반 조성
3. 향토자원 복합 산업화
   (1) 농촌 6차산업화 사업 활성화
   (2) 농어촌산업 개발 및 육성
4. 귀농·귀촌하기 좋은 여건 마련
   (1) 귀농·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2) 귀농·귀촌인 정착여건 지원 강화

❑ 삼락농정 추진체계

○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과 농촌의 위기상황을 **농민과 같이 극복하기 위한 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농어업인과 유관기관, 행정이 같이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 구성
- 10개 분과, 삼락농정 포럼 등 삼락농정위원회 구성에 전라북도 농업인단체연합회와 협의하여 추진
-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 행정 공무원 등 142명으로 삼락농정위원회 구성(2015. 2. 27. 출범)



참고 5. 도내 농촌협약 시군별 추진현황

시군명	추진현황	추진계획(예산확보 등)	비고
군산시	• 2021년 전담부서 신설 • 전략 및 활성화용역 추진중	• 계획수립 용역추진 • 2022년 농촌협약 공모대응	농업축산과
익산시	• 2020년 전담부서 신설 • 전략 및 활성화용역 추진중	• 계획수립 용역추진 • 2022년 농촌협약 공모대응	농촌활력과
정읍시	• 2020년 전담부서 신설 • 전략 및 활성화용역 추진중	• 계획수립 용역추진 • 2022년 농촌협약 공모대응	공동체과
남원시	• 2020년 전담부서 신설 • 전략 및 활성화용역 추진중	• 계획수립 용역추진 • 2022년 농촌협약 공모대응	농촌활력과
김제시 (공모선정)	• 2021년 전담부서 신설 • 2022년 협약대상지역 선정	• 농촌협약 체결 준비 • 협약반영사업 추진계획 수립	먹거리활력과
완주군	• 전담조직 구성 준비 중 • 23년 공모 준비 중	• 전담부서 구성 및 용역준비 • 2022년 농촌협약 공모대응	도시개발과
진안군 (공모선정)	• 2021년 전담부서 신설 • 2022년 협약대상지역 선정	• 농촌협약 체결 준비 • 협약반영사업 추진계획 수립	농촌활력과
무주군 (공모선정)	• 2021년 전담부서 신설 • 2022년 협약대상지역 선정	• 농촌협약 체결 준비 • 협약반영사업 추진계획 수립	농촌활력과
장수군	• 2021년 전담부서 신설 • 전략 및 활성화용역 추진중	• 계획수립 용역추진 • 2022년 농촌협약 공모대응	농업정책과
임실군 (협약체결)	• 농촌협약 체결('21. 7. 7.) • 농촌협약사업 추진중('21.~	• 계획 수립 농촌협약 체결(21.7) • 협약반영사업 사업추진중	농촌활력과
순창군 (협약체결)	• 농촌협약 체결('21. 7. 7.) • 농촌협약사업 추진중('21.~	• 계획 수립 농촌협약 체결(21.7) • 협약반영사업 사업추진중	농촌개발과
고창군	• 2021년 전담부서 신설 • 전략 및 활성화용역 추진중	• 계획수립 용역추진 • 2022년 농촌협약 공모대응	농어촌식품과
부안군	• 전담조직 구성 준비 중 • 23년 공모 준비 중	• 전담부서 구성 및 용역준비 • 2022년 농촌협약 공모대응	건설교통과

토론 2 지역균형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조성근**

스마트한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지만 대농 위주, 대기업 참여를 부르는 정책 이전에 기존 농민들의 생활을 먼저 돌보는 정책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토론 시간 안에 도시와 시골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와 로컬푸드 시스템 하에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할까요.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센터가 있고 급식센터가 없는 1개 군은 이웃 시 급식센터에서 대행해 주며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을 위주로 공급하고 있지만 부족한 품목은 도내 타 시군과 제주도에서 조달하여 나름 구색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8월 급식센터가 농협으로 바뀌면서 이웃 임실군 급식을 대행할 수 없어서 임실군은 급식 공급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 양극화 관련 문제의식

○ 학교

- 학생수가 적은 농촌학교는 급식비가 부족, 도시 학생은 잘 먹음
- 농촌학교는 급식물품 단가가 비싸고, 품목이 다양하지 않음

○ 급식센터

- 전주, 군산, 완주는 재단법인이고 다른 지역은 위탁 혹은 독자 운영.
-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비교적 운영이 되지만 군 단위 학생수가 적은 지역은 매우 힘들어 함
- 농촌 지역은 학교 공급가가 도시 지역보다 높고, 공급품목이 적고, 공급량이 적어 기획생산도 어려워서 학교와 생산자 양쪽에서 욕을 먹음
- 대책으로 푸드플랜이 수립되고 있지만 소비시장이 적은 농촌지역은 푸드플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생산자

- 생산량을 전량 소비하지 못함, 학생수에 비례하여 그 차이는 심해짐
- 생산 지역 별 농산물 가격 차이가 많이 남, 농촌 지역의 생산자는 절반 값에 판매하는 품목도 있음, 그리고 잉여량도 많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합니다. 지방자치제와 로컬푸드는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먹는 문제, 생산자들의 생산과 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별첨 1]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량 비교

품목	공급지역	총량(kg)	친환경	평균 단가	추정액(원)	비중	품목 순위
양파	전라북도	721,570	432,942	2,980	1,290,167,160	9.50%	1
	군산시	84,679	49,794	2,980	148,406,000	8.29%	1
	무주군	8,899	5,161	2,980	15,379,780	10.02%	1
시금치	전라북도	91,122	54,673	5,194	283,972,600	1.20%	20
	군산시	11,753	4,130	5,194	21,453,000	1.15%	22
	무주군	1,190	714	5,194	3,708,516	1.35%	19
상추	전라북도	69,288	41,573	6,273	260,787,000	0.91%	25
	군산시	7,559	3,788	6,273	23,765,000	0.74%	30
	무주군	994	596	6,273	3,738,700	1.13%	24
미나리	전라북도	41,960	25,176	14,000	352,464,000	0.55%	38
	군산시	5,171	0		0	0.51%	39
	무주군	533	320	14,000	4,480,000	0.61%	37

* 자료 : 군산먹거리통합지원 채상원 센터장 제공

[별첨 2] 전라북도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현황

순서	지역	지역별 추가 지원금(원)		기타지원금		비고
		초등	중등	초등	중등	
1	전주	없음	없음	30	30	바이전주지원금 22년 10원 인상 예정
2	익산	170	170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우수농산물 70원		170원 중에 20원은 유정란 의무사용
3	군산	100	100	80	80	80원 지역가공품
4	정읍	학교별 학생수에 따른 차등지원 - 학생수 50명 이하 : 도 지원단가 + 1인당 320원 추가지원 - 학생수 51명 ~ 100명 이하 : 도 지원단가 + 1인당 270원 추가지원 - 학생수 101명 이상 : 도 지원단가 + 1인당 100원 추가지원 - 특수학교 : 도 지원단가 + 1인당 270원 추가지원				정읍산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전액지원
5	남원	없음	없음	35	35	유정란 사용
6	김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2년 지원예정
7	완주			100	120	로컬지원금
8	진안	400	480			지원품목:친환경인증농·축산물 -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인증 및 GAP 농산물 포함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진안산 일반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한 축산물에 한하여 지원)
9	무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0	장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1	임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2	순창	123	141			친환경농산물 구입 지원금
13	고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4	부안	78	108			

* 자료 : 전북 영양교사회 백진순 회장 제공

토론 3 지역균형뉴딜과 지역의 과제에 대한 의견

전북고창군 4-H연합회 **정승환**

○ 주제 발표 2 - '지역균형뉴딜과 지역의 과제' 발표 내용(자료집 26쪽) 중

외국의 지역재생 정책 사례 중 커뮤니티 인프라세 도입은 최근 시사 이슈와 비슷한 사례이며, 지역개발에 필요한 세금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다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됨

○ 주제발표 2 - '지역균형뉴딜과 지역의 과제' 발표 내용(자료집 26쪽) 중

미국의 기회특구 지정 및 기회 펀드 제도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응용하여 절대 농지나 농촌 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처음에 자리를 잡는 시간 동안 세금을 면제 해줄 경우 처음 신생 기업들이 굳이 도심지에서 본사를 설립하지 않고 세금 면제 해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며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농업사업, 개인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구나 펀드가 설립되어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처음 시작단계에서 자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분명 많은 청년들이 농촌사회에 뛰어들어 도전해 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현장실습지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제도 및 환경을 구축하여 어린 청소년들이 농업에 대한 접근성을 열어줘야 장래희망의 진로에서 농업이라는 분야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농촌사회에 젊은 인력들이 유입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대부분이 결혼이나 귀농 귀촌 사황에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주거할 주택을 구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귀농을 성공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공주택을 설립 후 귀농 3~5년차는 거주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귀농 인구들이 귀농에 고민을 줄이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귀농 생활을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용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막상 사업들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한 사업 및 정책이 있는지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청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문자 메시지든 이메일이든 sns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공간 계획 제도 자료에 축산과 공장 등이 농촌다움을 훼손한다고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데 축산이 농촌다움을 훼손한다면 축산은 도시스러움인가? 축산업도 농촌사회의 일부인데 너무 혐오시설 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어디서 축산물을 생산해서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생각해야하는데 요새 정책들이 너무 축산농가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산은 다른 산업보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데 기존의 농가들이 버텨줘야 대한민국 축산업에 발전이 있는데 이런 식이면 기존의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들 폐업을 하면 나중에서야 필요하다고 생길수가 없는 구조가 현재 대한민국의 축산업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정부가 나중에는 축산업을 장려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업도 농촌의 한 부분입니다. 농촌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4 토론요지

전북대학교 교수 **손재권**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과 '디지털 뉴딜(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그린 뉴딜(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안전망 강화(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등 뉴딜방향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20.7.14) 하였음

○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 목표는 지역경제혁신,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이고, 중점추진방향은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 ②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의 확산 지원(지방재정 투자심사 간소화, 지방채 초가발행, 지방교부세 지원, 뉴딜·지역관련 펀드 투자, 균특 회계인센티브 제공),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④ 지속가능한 지역균현 뉴딜 생태계 조성 등

○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지역균형 뉴딜 규모는 전체의 약 47%인 75조 3천억 원

• 한국판뉴딜 '지역균형' 확장(총 75.3조 원, '21년 13조 원 투입)

- 정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국비 42.6조 원)
- 지역 관련 뉴딜에 지자체·공기관 주도형 사업 포괄

○ 한국판 뉴딜 방향성과 기반 마련에 주력한 정부가 한국판 뉴딜 확산을 가속화하여 그 효과를 전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참여와 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즉,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 지역의 적극적 참여 및 협력이 필요함

○ 농촌재생 뉴딜 사업에 대응한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삼락농정(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보완 필요

• 삼락농정에 대한 전라북도 거주 농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20.12.5~12.6, 전북농민연맹 주관)

- 인지도(58%) : 들어는 보았다 40.6%, 잘 알고 있다. 17.4%

- 삼락농정 정책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된 정도(46.6%)

• 매우도움이 되었다(5.7%),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40.9%)

- 삼락농정의 진행방향 계속 유지 및 대폭 수정 보완(66.6%)

• 현재진행방향대로 계속 유지 확대 21.7%, 계속 이어가되 정책방향의 대폭 수정 보완이 44.9%

-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농업 정책방향

• 식량보존과 농업생산량 증대 30.6% 〉 현장 농민과 도행정과의 직접적 소통 19.0% 〉 기후위기 등의 재난대비 14.3% 순

• 농촌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전북도의 삼락농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대폭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재생확산지원 사업 추진 체계 개선

• 전북도, 한국농어촌공사(KRC) 전북지역본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재생확산지원사업 추진은 바람직함

• 이와 관련 농촌협약 및 농촌재생뉴딜사업 등과 같은 새로운 농촌정책에 적합한 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시군) 및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 사업 적극 추진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

- 각 지자체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명칭 등 정리

- 기존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강화하여 농촌협약 및 농촌재생사업 추진의 체계화 필요

- 농촌재생사업의 확산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지역주민, 전문가 그룹 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속적 상시 소통기회 마련으로 수요자 의견 적극 수렴 반영

○ 농촌재생사업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제도 조기정착 필요

• 시군(지자체)이 수립한 농촌공간기본(관리)계획에 의거 농식품부-지자체 간 협약(농촌협약) 체결

-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과 공감대 형성 방안 모색 필요
  - 지역주민 교육 및 설명회 개최, 홍보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적극 추진
  -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창의적 사업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지역자원 및 현황 조사 내실화(현장과 계획의 합리성 확보)
  - 농촌협약관련 농촌공간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공간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 가이드라인(지침) 정립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0까지), 농촌협약 시행에 따른 시설물(커뮤니티센터, 다목적 회관 등 생활 SOC) 운영주체 전문성 확보,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지원(국고)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시설물에 대한 일정규모(최소한)의 운영관리비 국고지원 제도화(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병행)
- 주민 자구노력 +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 등) 시 인센티브 제공 등

○ 농촌공간전략계획을 토대로 축사·공장이전·빈집정비 등 농촌공간정비와 정주환경, 경제기반, 사회서비스 등 기능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재생 뉴딜 프로젝트는 추진은 바람직함

- 단, 농촌재생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축사이전 등 농촌공간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실현가능성, 지속적 추진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성공적 지역균형 뉴딜 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 중심의 사업 개발, 지역 맞춤형 뉴딜 사업의 발굴과 추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규제완화, 재정적 지원 등)의 확보, 대국민 의견 수렴 및 홍보 등이 필요함

토론 6 지속 가능한 농촌 미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가 해결책

전북대학교 교수(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총괄) **한지훈**

□ (순환경제와 에너지신산업)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순환적 형태의 자원 활용을 지향하는 경제 시스템임. 현재의 경제 및 산업 시스템이 제품 생산에서 판매, 소비에 이른 뒤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방향적 과정인 것에 반해, 순환경제는 소비된 뒤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재활용해 다시 생산품의 형태로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학적 접근임. 2015년 11월 30일 파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함께 대안으로 제안되었음.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중요 과제중 하나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조속한 조성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작업반'**을 두고 현재까지 13개소를 선정***하여 각 부처 별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음.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기피·혐오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님비현상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 문화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미래부

*** '14년 시범사업(3) : 환경부(홍천), 산업부(광주), 미래부(진천)
'15년 본사업(10) : 환경부(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산업부(안산, 순천 남해, 하동), 농식품부(김제)

○ (홍천군 친환경에너지 타운 효과) 국내 최초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인 홍천 소매곡리*는 SK E&S가 환경부 강원도 홍천군과 협력해 주민 기피시설인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바꿔 활용하고, 퇴비·액비도 만들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했음. 또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장 방류수로 소수력발전까지 하는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었음. 가축분뇨와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연간 750세대가 사용가능한 60만㎡ 도시가스를 주민들에게 공급함.

* 당초 57가구였던 마을주민이 사업완공 전 이미 70가구로 증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친환경 그린 수송 연료로의 활용) 최근, 바이오가스는 고순도 정제과정을 거쳐 수소, 메탄, 에탄올, 전기 등 친환경 그린 수송 연료로 전환 가능한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이 개발되었음. 이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친환경 수송 연료(탄소중립연료)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원료조달-연료생산-차량운영'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그린뉴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입안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확대 필요)친환경에너지타운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와 자원 고갈등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제언)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넘어 **친환경소재타운** 조성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체 작물이 필요
-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는 현재 외국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나, 장기적으로는 국산화가 꼭 필요한 사업 분야로 대규모 소재 작물 원료공급을 위한 새만금이 원료공급단지로 최적지임

○ (농업용 폐비닐 증가) 농업용 폐비닐(멀칭필름)은 연간 약 30만 톤 이상 발생, 농촌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우리나라*는 가장 오염된 해안을 가지고 있음

* 세계 최고 미세플라스틱 오염지역 2위 인천, 3위 낙동강 하류

○ (대체재인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 바이오플라스틱의 산업화 적용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10년 이내에 석유계 플라스틱시장*의 30%까지 대체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확대 : '23) 262만 톤(예측)
*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시장규모 : 4만 톤

○ (케나프의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우수성) 케나프는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산업소재* 특성으로 간척지** 등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보유

* 플라스틱 자연분해 촉진 성분인 셀룰로오스를 상당량 함유
** 전북 우수한 대면적 생산지 "새만금" 보유(실증부지 5ha 확보)

토론 7 농촌재생 뉴딜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한 농민단체의 제언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사무국장 **홍명희**

1. 들어가며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님의 농촌재생뉴딜 추진 기본방향과 정철모 전주대 교수님의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의 과제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 연합회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범) 저희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는 1976년 1월 9일에 설립한 농민단체입니다. 줄여서 '가농'이라고 부릅니다. 농민 스스로의 각성과 협동으로 생명존중과 공동체 삶의 실천을 통해 농업, 농민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과 겨레의 복음화와 인류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벌써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직과 지향) 저희 가농은 생명농업을 통한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도시생활공동체라는 두 개의 조직을 주축으로 농민과 도시민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생명농업을 확장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도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여, 더 나아가 국가의 식량자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부활동) 가농은 세부적으로는 창조질서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소농·다품목을 지향하고 있으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명농업을 실천합니다. 또한 농촌생활공동체인 분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농법과 더불어 신앙, 생활, 농민의 지역적 역할 등을 도모하며 각 지역에서 일상적인 실천을 합니다. 특히 유기농법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환경오염에서 벗어나는 생명농업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모색과 전환을 통한 연구 작업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이에 생명농업을 실천하려는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법의 정보제공과 유기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명농산물 나눔터' 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농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본격적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농촌의 현황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의 국토계획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농촌은 국가 차원의 공간계획에 소외되어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농촌은 황폐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난개발은 더욱 농촌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농촌 난개발의 치유와 예방, 농촌다움의 복원, 일터·삶터·쉼터로의 기능 재생을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과 귀농, 귀촌 활성화로 도시 과밀화 해소 및 도-농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목표는 매우 좋으나 결과는 농민단체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투여된 대한민국의 토건개발과 현재의 자본 중심의 개발발전정책은 농촌은 도시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농촌정책을 내놓아도 긍정보다는 부정적, 비극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농촌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 사업(도로 등 SOC 포함)은 지역 유지들과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에게 떡고물을 남기고, 돈은 도시인이 운영하는 각종 업체를 통해 도시로 되돌아갑니다. 지역에 남는 것은 주민 갈등과 관리·운영비만 들어가는 각종 시설과 텅 빈 도로뿐입니다. 농촌개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외부의 자본과 사람들이 들어가 농촌을 파괴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는 그곳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촌을 바라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농민과 농촌현장을 대상화하여 모든 정책의 실험장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농민들이 자부심과 함께 행복한 삶의 터가 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조사, 귀 기울임, 전문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3.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의 과제에 대하여

1) 주민수용성 확보

지역균형 뉴딜 지역의 과제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 주도의 협의체가 필요하지만 주민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민간기업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부나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사업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농민단체와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책은 주민수용성, 다시 말해서 열린 주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실적인 사업추진의 모델이 전라북도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 재생 정책 제안

① (귀농귀촌 활성화)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귀농귀촌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이 매우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길 요청드립니다.

② (소농의 지원)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판로확보입니다. 가톨릭농민회는 소농의 활동을 지원하며 판로확보 및 소규모의 가공 농가 물품의 나눔에 가치를 두고 도시소비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 가공 농가에도 haccp 시설을 갖추라는 변경된 법안에 현장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형 농업과 소규모농업을 분리하여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말 따로 행정 따로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지자체에서 소농이 농사짓고 어려움이 없이 판로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③ **(청년농부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후계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청년농부들이 장래가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군으로서 농업이 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연구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렵다면 단계적 방안으로, 마을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청년 반장(가칭' 노인들의 교통이용권 확보, 간단한 기술로 생활의 어려움 해소)은 처음에는 도시에 살면서도 농촌에 직장개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여, 이러한 인력들이 농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결해보는 정책입니다. 또한 농촌에 가임인구(남녀 25~45세)에 일정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의 지원도 무척 중요하지만, 가능성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니 이 또한 청년농부 지원과 맞물려 고민해보아도 좋을 거 같습니다.

3)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농촌재생 정책

① **농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정책)** 농촌주민들에게 의료, 교육, 주거, 돌봄, 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가 정한 최소서비스 항목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관련해 국내 시·군의 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② **농촌의 고유한 기능에 대한 모색)** 경쟁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기존의 농림어업 생산보조금을 줄이고, 농림어업의 생태적 발전을 위한 공익적 직접 지불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 돈을 농촌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으로 지급해 빈사 상태의 농촌경제와 농촌주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농촌경제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4) 새만금의 역할 모색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지역 재생정책과 관련하여 새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디지털과 함께 하는 융복합형 한국판 뉴딜의 중심지로 육성하며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는 천혜의 자원과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바다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풍성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등 아주 좋은 계획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산단에는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와 같은 미래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는 그린뉴딜, 한국형 뉴딜의 중심지로 새만금을 그려가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사업과 방향들은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새만금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질 문제가 너무 발목을 잡고 있어 여러 가지의 용역을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론 내리고, 이후 사업들을 이에 맞추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아직도 해수유통에 미적거리며 환경단체 등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의 사업들을 추진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새만금이 그린뉴딜 한국형 뉴딜사업의 전진기지가 되어 전라북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핵심사업과 방향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